

연례정보보고서 2000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와 전망:

통 일 연 구 원

## - 목 차 -

요 약 .....	4
<b>I. 통일환경</b> .....	<b>14</b>
1. 동북아정세 .....	14
가. 동북아 안보환경 .....	14
나. 동북아 4국의 상호관계 .....	17
2.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	39
가. 한·미관계 .....	39
나. 한·일관계 .....	42
다. 한·중관계 .....	43
라. 한·러관계 .....	47
<b>II. 북한정세</b> .....	<b>51</b>
1. 대내정세 .....	51
가. 정치동향 .....	51
나. 경제동향 .....	54
다. 사회동향 .....	59
라. 군사동향 .....	62
2. 주요 대외관계 .....	66
가. 북·미관계 .....	66
나. 북·중관계 .....	70
다. 북·일관계 .....	72
라. 북·러관계 .....	75
3. 대남동향 .....	80

Ⅲ. 남북한 관계 .....	84
1. 정상회담과 남북대화 .....	84
가. 남북정상회담 .....	84
가. 부문별 남북회담 .....	86
2. 군사안보 분야 .....	91
3. 교류·협력분야 .....	96
가. 경제분야 .....	96
나. 사회문화분야 .....	103
4. 인도주의 사안 .....	106
가. 이산가족문제 .....	106
나. 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	110
다. 대북지원 .....	111
라. 인권문제 .....	115
5.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관계 .....	117
<부록>2001년도 주요 사건일지 .....	123

## I. 통일환경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문제, 대중 강경정책, 그리고 중·러 안보강화 등으로 2001년 미·중·일·러 사이에 안보갈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북아 4국간 경제의존도 증대 추세 및 지역안정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으로 인해, 4국간 갈등완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간 대화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주변 4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을 강화할 것이나, 이들 모두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것이다. 따라서 2001년 주변정세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 1. 동북아정세: 4국간 안보갈등 부각

2001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무르익게 될 것이나, 미·중·일·러 4국간 안보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미 행정부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강행하고, 일본과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만에 대한 안보공약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대응, 중·러는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첨단 군사무기 및 기술이전을 통해 안보연대를 확대할 것이다. 특히 국가미사일방어(NMD)와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 구축문제를 둘러싸고 미·일 대 중·러간 안보문제에 대한 갈등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부시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 대만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파룬궁 등 중국내 인권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미·중관계는 순조롭게 전개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TMD 참여, 군사력 증강, 역사교과서 개정문제 등으로 일·중간 안보갈등도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러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 개정과 NMD문

제로 계속 대립할 것이다. 따라서 미·일, 중·러간 안보협력 강화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역간 군비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

이처럼 4국간 안보갈등이 부각되겠지만 이들 모두 동북아지역의 안정유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연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이 중국 서부지역 대개발 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주변 4국간 경제교류·협력은 증대될 것이다. 이는 4국간 안보갈등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2. 한반도 통일환경: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 경쟁 심화

주변 4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대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4국 상호간 안보갈등이 부각될수록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할 것이다. 특히 미·중·일·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되,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북한과 미사일회담 등 관계개선을 탐색할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6자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북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대북 수교교섭을 재개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게 '중국식 개방정책'을 수용하도록 설득하고, 장쩌민 주석의 방북을 통해 대미 안보공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대북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러시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 북한에 경제·군사원조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복원을 모색할 것이다.

## II. 북한정세

### 1. 대내정세: 경제개혁과 변화에 대한 사회적 적응력 제고

#### <정치동향>

2001년 북한은 정치부문에서 김정일 중심의 권위구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주민통제를 통한 정치적 안정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2000년도의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일의 대내외 위상이 제고되었다는 판단 하에 김정일을 연방제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민족의 선구자로 부각시키고자 할 것이다. 김정일은 정치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경제재건에 힘쓸 것이며, 경제관련 현지지도의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체제안보 및 대내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 군(軍) 우선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 및 서울 답방과 대미 미사일협상 등 현안의 시급성으로 인해, 북한은 일부 경제기술 관리의 역할을 강화시킬 것이나 대대적인 당, 군, 정 조직개편을 시도할 여유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2002년이 주체 90년(김일성 탄생 90주년)임을 감안할 때, 제7차 당대회는 조직개편 등의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2002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 <경제동향>

북한은 2001년도 공동사설에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 것 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의 전개에 부응하는 경제력 회복에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식량난이 완화됨에 따라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생존 보다는 발전에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에는 김정일 식의 새로운 경제정책 노선의 가시화 및 정책변화 속도의 가속화가 예상되며, 경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도 있다.

대내적으로는 농업부문의 초보적 개혁과 기업경영조직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의 정책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단위 중심의 영농구조 개혁과 공업기업소의 지배인 책임제와 같은 실험적 조치들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실험단계를 거쳐 지속적으로 공장, 기업소의 생산성 향상과 채산성 제고를 위해 산업조직의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내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북한 원화의 평가절하 및 기존 국정 가격체계의 정비, 일부 소비재 경공업제품에 대한 시장가격 제도 도입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은 신의주 등지에 시장기능이 강조된 경제특구를 건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경제특구로는 중국경제와의 연계성(수출입 및 기술·자본 유입)을 지니고 있는 신의주가 가장 유력하며 남북경협과 연계하기 위해 남포 및 개성공단이 경제특구로 선정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및 EU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수출시장 확보와 기술·자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여부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해 식량과 에너지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선별적으로 남북경협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동향〉

중국 등으로 이탈하였던 주민들이 귀환하고,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 및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됨으로써 북한사회에 외부 정보의 유입이 확대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문화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새로운 정책으로 경제난이 완화될 경우, 이는 북한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사상적 통합을 근간으로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것이며,

사상교양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주민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사상교양 논리와 새로운 사고의 논리가 상호 충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남한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반제국주의적 선전의 설득력은 약화될 것이다.

북한은 사회적 갈등의 표출을 예방하기 위해 김정일의 사고방식 '전변'의 논리와 김일성 노선의 재해석 등을 통해 주민들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정책변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군사동향〉

북한은 군사역량 뿐만 아니라 정신전력의 강화를 독려하면서 군대 중시사상을 기반으로 군의 충성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미국 및 남한과의 대화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긴장을 조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행동을 자제하면서, 군사문제를 미국과 해결한다는 입장 하에 남한과의 군비통제에는 소극적 입장을 취할 것이다. 반면 한반도의 대화분위기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유엔사 해체와 미군 주둔의 불필요성을 부각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대외동향: 전방위 외교 확대

북한은 체제위협요인 해소, 경제회복,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을 위해 전방위 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대외정책의 최대 현안은 미국 부시행정부와의 관계설정이다. 특히 미사일회담은 북·미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보상요구가 충족될 경우, 북한은 미사일 수출 및 개발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 실리 추구를 위해 체제수호의 안전판인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궁극적으로 포기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차관도입을 위해 미국에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요구할 것이며, 북·미 군사회담 개최와 주한미군의 위상변화 등을 요구할 것이다.

대일관계와 관련하여 북한은 수교교섭을 재개할 것이다. 특히 북한 미사일문제와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일본의 입장과 경제보상금 획득에 중점을 둔 북한의 입장이 계속 쟁점이 될 것이다. 북·일수교 협상의 일괄타결이 지연될 경우, 북한은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의 부분적 해결을 수용하는 대신, 일본의 차관제공과 대북투자의 우선 실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신년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으로 대중관계의 중요성을 입증한 북한은 대중 우호관계를 강조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중국개혁 모델로부터 시사점을 얻고 북한경제 발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와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 구축,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문제 등에 대해서 중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자 할 것이다.

대러시아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2000년에 체결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과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방북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할 것이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예견된다. 북한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러시아와 유대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경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경의선 철도와 관련 러시아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외교입지를 강화하고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등 서방국가와 국교수립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진출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지원 확보를 위해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아울러 ARF 등 안보 관련 기구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활동반경을 확대

하고자 할 것이다.

### 3. 대남동향: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 조절

북한은 대남관계 개선의 기초를 유지할 것이며, 특히 에너지 및 식량부문에서의 경제지원과 대규모 경협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에 호응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적십자회담과 각 분야별 실무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협력사업의 구체적 이행과정에서 속도를 전술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리를 확보하고, 남북협력 증진으로 인한 체제이완을 차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금강산사업의 확대, 개성공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미지 개선 효과 및 경제적 실리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체육교류 및 문화·예술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 Ⅲ. 남북한 관계

### 1. 정상회담과 남북대화: 남북관계의 제도화 모색

2001년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다. 이 문제는 6·15 공동선언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 동안 김 위원장을 비롯하여 북한의 고위인사들이 '답방 실현'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이 없는 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적절한 시점에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통일방안과 한반도평화정착 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의 정례화에 대한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 분야별로 회담이 활성화될 것이다. 남북장

관급회담과 함께 경협실무회담, 경의선 복원 관련 국방실무회담, 대북에 너지지원 실무회담, 임진강수재방지 실무회담 등 구체적 사업을 중심으로 실무회담이 다원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회담들이 점차 정례화됨으로써 남북대화가 제도화될 것이다.

## **2. 군사·안보분야: 제한적 신뢰구축과 평화정착 논의 활성화**

경의선 복원과 관련하여 남북한간 군사관계에 있어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기본적으로 남북군사회담에 대해서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논의는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4자회담의 틀에서 미·중이 보장하는 방식의 한반도평화체제 전환방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평화정착의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 **3. 교류·협력분야: 교류·협력의 다원화와 심화**

### **<경제교류·협력>**

남북경협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은 밝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대북 진출이 제약을 받을 것이며, 수익성이 불투명한 장기투자 및 대규모 지원사업의 추진은 어려워질 것이다.

경의선 복원과 관련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임진강 수재방지, 대북 전력공급, 공동어로사업, 개성공단 건설 등의 분야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며, 금강산 관광사업의 사업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 완화에 의해 북·미 경제관계 개선의 기초가 마련된 만큼, 남한과 미국기업들의 대북 동반진출이 모색될 것이다. 또한 북한 제품의 미국 수출시장 진출과 더불어 남북한 임가공 교역도 증대될 것이다.

####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이 정례화·다원화되고, 사업형태도 다양해질 것이다.

문화예술분야의 상호 방문 공연이 지속될 것이며, 각종 체육 경기의 정례화를 통한 인적 교류 확대 및 남북 단일팀 구성 등 체육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 방송분야의 경우 남북공동제작 형태로 다큐멘터리 등이 제작될 가능성이 크며, 평양신학원 개원 지원 등 각 교단 및 종단별로 종교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경평축구의 부활, 학자·학생의 상호교류,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 등이 사회문화분야의 대표적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전후하여 상징적 문화교류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와 병행하여 북한체제 이완에 대한 북한당국의 우려가 제기될 것인 바, 상징성이 큰 이벤트 중심으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반면 소규모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인도주의 사안

이산가족문제 및 인도주의 사안의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며, 상봉 및 서신교환의 정례화, 면회소 설치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이산가족 차원에서 부분적

인 해결(상봉 및 서신교환)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증가될 것이며, 경제협력방식의 대북지원 사업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참여했던 서방국가들과 북한간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대북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는 긴급구호성 대북지원보다는 북한의 자생력강화를 위한 개발사업을 확대할 것이나, 북한은 양자간의 직접지원을 통한 경제지원을 희망할 것이다.

NGO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점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관심을 의식한 북한이 인권문제에 부분적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I. 통일환경

## 1. 동북아정세

### 가. 동북아 안보환경

미, 중, 일, 러 등 주변 4국은 지역안정 유지에 공감하면서도, 21세기 동북아 신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하기 위해 경쟁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현격하게 감소하였으나,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유리한 국면을 장악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외교공세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경의선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문제가 제기되는 등 지역국가간 경제의존도의 확대 추세가 지속되었다.

#### (1) 미·일 대 중·러간 느슨한 경쟁구조 조성

세계 유일 강대국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미국은 역내에 10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일본과 TMD체제 공동개발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역내 질서 주도권을 유지하였다. 미국은 「페리프로세스」에 따라 일본, 한국 등 동맹국과 긴밀한 안보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한편, 대북 고위급 접촉과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일의 TMD 공동개발 연구 등 안보협력 강화추세는 중·러의 안보불안감을 자극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NMD 및 TMD 체제 구축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역내 군비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중·러는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유엔총회에 「ABM조약 준수 결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대만문제 및 체첸사태와 관련해서 미·일 대 중·러간 갈등이 조성되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대만안보강화법안」을 통과시켜 대만에 대한 안보지원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였다. 일본은 자위대의 주변사태 개입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리덩후이 대만총통의 방일을 추진하는 등 중국을 자극하였다. 체첸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을 빚었던 러시아는 중국의 대만정책을 지지하였고, 중국은 러시아의 체첸 분리주의운동 진압정책을 옹호하였다.

이처럼 미·일과 중·러 사이에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이 조성되었으나, 정치·안보·경제 등 제반 영역에서 협력 필요성으로 인해 냉전시대와 같은 구조적인 대립구도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동북아 4국간 긴장이 조성된 근본적 이유는 이들이 동북아 신질서 구축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였기 때문이다.

## (2)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역내 긴장완화

역내 신질서 구축과정에서 주변 4국간에는 경쟁이 심화되었으나, 남북한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주변 4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개최, 5개항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지역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문제의 주도권을 남북한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주변국들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기 위한 외교적 행보를 강화하였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군 요구가 대두되고, NMD와 TMD체제 구축명분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남북한에 대한 외교공세를 강화하였다. 중국은 남북한 당사자에 의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주장해 오고 있는 바,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본은 북한과 수교교섭을 재개하여 대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였고, 러시아는 푸틴의 방북을 통해 북

한과의 관계복원을 시도하고 6자회담 개최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주장하였다. 주변국들 모두가 한반도 안정유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쟁 심화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 과정에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정상간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한국이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북한은 아세안지역포럼에 가입하고 이탈리아, 필리핀 등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였다. 4자회담이 재개되지는 않았으나, 유엔총회와 G-8 정상회담 등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지선언이 발표되었다.

### (3) 지역국간 경제의존도 심화

1999년 동아시아국가들이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2000년에 들어서는 지역국간 경제교류·협력이 확대되었다. 한·중간의 경우에도 1998년 교역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1999년 이후 경제교역 규모가 다시 급증 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러간에도 2000년 상반기 교역규모가 전년도 동기 대비 31% 이상 확대되었다. 1999년 11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관한 양자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미·중간에도 경제협력 분위기가 심화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철도연결과 경의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는 동북아 지역국간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주룽지(朱鎔基) 중국총리의 한·일 방문 시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서부지역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한 사실도 한·중·일간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월의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간에 경제협력문제



가 논의되었다.

## 나. 동북아 4국의 상호관계

### (1) 미·일관계

2000년의 미·일관계는 ① 미·일 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 ② 미·일의 전략적 역할 분담에 따른 일본 군사력의 질적 증강 및 제도적 정비, ③ 북한문제에 대한 공조체제의 강화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탈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미·일은 1996년 4월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미·일 동맹을 재정의하였다. 그 후속조치로서 1997년 9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을 제정하고, 1999년 5월 관련 법안을 확정하였다. 이어 2000년 10월 미·일동맹 강화조치들이 보완되었다.

먼저 미·일 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 발표 및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제정을 계기로 일본의 군사적 활동영역이 본토방위 중심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부시 미국 신행정부가 미·일 동맹 강화를 역설하고 있는 바, 일본 자위대의 활동영역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방대학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의 대일정책 제언처럼, 21세기의 미·일관계는 '지도력의 분담'(power sharing)까지도 염두에 두는 '성숙된 동반자'(a mature partnership)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일본은 미·일의 전략적 역할 분담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질적 증강, 제도적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24조 2,300억 엔의 경비가 소요되는 「1996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1996~2000년)을 거의 달성하였는 바, 2001년부터는 「2001 중기 방위

력 정비계획」(2001~2005년)을 추진한다. 「200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이 완료될 시점에는 원거리 작전능력,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테러 등 특수전에 대한 대처능력, 전자전 능력 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또한 일본 의회는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안보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 개정안」 등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 법안을 통과('99.5)시켰으며, 2000년에는 「주변사태법」에서 삭제된 「선박조사 활동법」을 통과(10.30)시켰다. 나아가 일본은 '일본 유사시'에 자국 영토내에서 자위대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유사법제의 정비, UN 평화유지군(PKF)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PKO 협력법의 개정,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개정, 방위청의 방위성으로의 승격 등 군사역할 증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체제에서도 나타났다. 미·일은 한·미·일 공조체제의 틀 내에서 대북 억지력의 강화를 도모하였고, 힘을 바탕으로 한 대화정책을 추구하였다.

2001년에는 미·일동맹 강화를 역설하는 부시 행정부가 등장함으로써, 미·일은 '지도력의 분담'(power sharing)을 지향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일본은 21세기 정치·군사대국을 지향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역할증대를 도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은 TMD체제 공동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안보협력을 확대할 것이나, 미국이 대일 무역역조 개선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무역마찰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미·중관계

미국이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오폭사건 조사결과를 중국 측에 통보하

고, 양국이 중국대사관 폭격사건 후 중단되었던 안보대화와 군사교류를 재개함으로써, 2000년에 들어 중·미관계는 호전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만문제와 중국 내 인권문제 그리고 미국의 탄도탄 요격미사일개발 움직임 등은 중·미관계를 '건설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0년 중·미간에는 지도부 교환방문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승광카이(熊光楷) 중국군 부총참모장이 미국을 방문(1.24~26)하여 연례 국방협의회에 참석함으로써, 나토의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폭격 이후 단절된 군사교류가 재개되었다. 스윈성(石雲生) 중국 해군사령관(4.15~22), 량광례(梁光烈) 난징군구 사령관(6.16~20), 위용포(于永波) 중국군 총정처부장(10.25~11.4) 등 중국군 지도자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안보대화를 개최하고 군사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웨스트포인트, 볼링 공군기지, 패트릭 공군기지, 잭슨 해군기지 및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미국군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졌다.

미국의 고위급 군사안보담당 지도자들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과 안보적 신뢰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스트로브 탈보트 국무차관이 중국을 방문(2.16~19)하여 제3차 중·미 안보회담을 개최하고, 핵 비확산 문제와 미국의 NMD계획 추진 등 안보현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블레이 태평양 사령관(2.27~3.2), 샌디 버거 백악관 안보보좌관(3.28~30),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6.22~23) 등이 중국을 방문하여 대만문제와 미사일방어체제 개발문제 등을 논의하고 안보대화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나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강조하였다.

7월에는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무기통제와 군축, 군사교류 등 양국간 군사안보관계 개선문제를 논의하고, 대만문제와 미국의 NMD, TMD체제 구축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였다. 중국은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실제로 대만을 공격할 의도는

없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또한 군사분야 환경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미국 미사일 순양함 첸슬러스빌호가 중국 칭다오 해군기지에 기항(8.2~5)하였으며, 중국 미사일 구축함 칭다오호와 연료보급선 타이창호가 미국의 진주만과 에버렛 군사기지에 기항(9.4~7, 14~18)하는 등 중·미간에 군사교류가 전례 없이 증대되었다. 또한 중국 외교부가 "어떤 국가에게도 핵무기 운반에 사용될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11.21) 뒤,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위성 발사를 포함한 교역 및 우주협력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영구 정상무역관계」(PNTR) 부여법안을 통과 시킨 사실도 악화된 중·미관계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미 하원과 상원이 대중 PNTR 부여법안을 통과(5.24, 9.19)시키고, 클린턴 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10.10)함으로써,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비한 미국 내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WTO 가입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PNTR 지위 부여문제를 둘러싸고 중·미간에 갈등이 발발될 가능성이 감소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의 통신, 자동차, 농산물 등 분야에서 50% 이상 관세인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고, 미국 제품의 대중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중·미 정상 사이에 두 차례 회담이 개최되었다. 유엔 밀레니엄 정상 회의에서 클린턴과 장쩌민이 정상회담(9.8)을 가졌으며, 11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아·태경제협력체지도자회의' 참가 시에도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클린턴은 강력하고 안정적이고 번영된 중국이 아·태지역과 세계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장쩌민 주석도 미국과 관계개선을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처럼 중·미관계가 완화추세를 보이게 된 것은 중·미 양국이 관계개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고립정책보다는 개입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중국을 기존 국제질서에 편입시키는 데 유리

하고 아·태 및 세계질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중국은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서부 대개발 등 대내경제 발전에 유리한 외부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국은 미국에서 신 행정부가 출범되기 이전에 미국과 관계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미는 세계관, 안보관, 가치관, 무기확산 문제 등에 있어서 심각한 이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만문제가 중·미관계 발전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 이들 요인들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논쟁이 제기되었고, 중국에서도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중·미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근본적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패권안정론에 입각하여 NATO를 동유럽지역으로 확대하고 일본과 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세계질서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 하였다. 미 합참이 「조인트 비전 2020」을 발표하여 중국을 1차대전 이전의 독일과 같은 세력으로 비유하고 미국의 잠재 경쟁자로 암시하였는 바, 이 점도 중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지위에 도전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세계 질서의 다극화를 주창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 인도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에 의한 단극질서 구축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 국제 핵무기 감축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NMD와 TMD체제 구축 계획과 ABM조약 개정 움직임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또한 중국은 나라야난 인도 대통령을 초청(5.28~6.3)하여 미국에 의한 단극체제 형성 반대와 다극화 질서 구축 입장을 확인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상과 외무장관들을 초청하여 「중·아프리카 협력포럼」을 개최(10.10 ~12), 개도국간 협

력을 강조한 주요 목적 중의 하나도 미국에 의한 일방적 국제질서 주도를 견제하려는 데 있었다.

인권문제도 중·미관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중국은 「인권백서」를 발간(2.17)하여 중국 내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99년 미국의 인권기록」 보고서를 발표(2.27), 미국도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미 이민국이 파룬궁 신도에게 정치비호권을 부여(2.17)하고, 미 의회가 3월 10일을 티벳기념일로 제정하고 중국 정부에게 달라이 라마와 정치대화를 촉구하였던 것도 중·미간 갈등을 자극하였다. 세계 민주주의의 신봉자로 자처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에 「중국인권 비난결의안」을 제출하여 중국 인권문제를 국제문제화 하려 하였으나, 중국이 「불상정 동의안」을 통과(4.18)시킴으로써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였다. 클린턴이 달라이 라마를 접견(6.21)하고, 미 국무부가 「2000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를 발간하여 중국의 종교자유 박해를 비난(9.6)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가치관을 중국에 강요하는 내정간섭 행위이라고 일축하였다.

2000년에도 대만문제는 중·미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사안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대만 총통선거 과정에서 독립 여론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대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공표하였다. 대만 총통선거 직전 중국 국무원은 「하나의 중국원칙과 대만문제」 제하의 백서를 발표(2.21), 대만이 통일대화를 장기간 지연시킬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 하원은 「대만안보강화법안」을 채택(2.1)하여 미 국방부에게 대만 군과 직접 대화채널 구축, 대만 군간부의 미국 내 훈련기회 확대, 「연례 대만안보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였다. 10월에는 미 의회가 대만의 「유엔가입 지지결의안」을 통과시키고, 11월에는 「2001 재정연도 대외행동수권법안」을 통과시켜 행정부에게 대만에 대한 안보공약을 강화하도록 촉구하였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제공과 TMD체제 포함 여부가 중·미관계

에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미 국방부는 대만에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AMRAAM), 장거리 미사일탐지 레이더(Pave Paws) 등 13억 800만 달러 상당의 무기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의회에 통보(9.29)하였다. 그리고 미 의회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 미사일 배치를 증강하고 있다면서, 대만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만을 TMD체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중국이 이스라엘로부터 2억 5천만달러 상당의 공중조기경보체제(AWACS)를 구매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줄여나가기로 약속한 「8.17 공동성명」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대대만 무기판매 중단을 요구하였다.

중·미간의 경제통상관계는 1999년 11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한 양자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미간 교역액이 613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23.4% 증가된 것이다. 다만 중국과의 교역에서 미국의 적자폭이 확대되었는 바, 이 점은 양국간 경제적 갈등소지를 제공하였다. 미국의 대중국 투자는 11월까지 73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로써 미국의 대중국 투자누적 규모는 597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2001년 1월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는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12월 대만에서 입법원선거가 실시되는 바, 중·미간 정치·안보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럽스펠드 국방장관 등 미국의 외교안보팀이 NMD와 TMD구상을 적극 추진하고 대만에 대한 안보공약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중·미관계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2001년 초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중·미 모두 상대방과 관계악화를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미는 안보대화과 군사지도자 교류 및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결국 중·미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병존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전개될 것이다.

### (3) 미·러관계

엘친 러시아 대통령이 1999년 12월 31일 전격 사임함으로써 푸틴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푸틴 대행과 전화통화를 통해, 러시아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을 요청하였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를 방문(1.31~2.2)하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및 푸틴 대행과 회담을 개최하였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의 불가피성과 이를 위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 측이 체첸사태를 군사적 수단이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식량지원 등 경제협력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러간에는 미국의 NMD체제 구축문제, ABM 조약 개정문제 및 체첸 사태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었다.

푸틴은 대통령 선거(3.26)에서 당선된 이래 '강대국 러시아 건설'을 위한 실리외교를 적극 전개하였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면서도 NMD체제 구축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러시아 하원은 미국에게 NMD계획 추진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7년전 미·러가 체결한 START II를 비준(4.14)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ABM조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NATO가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러시아 대통령은 의회와 START II 탈퇴문제를 협의한다는 조건을 첨부하였다. 푸틴 대통령 당선자는 START II 비준 통과에 대한 성명을 발표(4.15)하면서 미국에 대해 1997년 9월 합의한 START III 보다 더 큰 폭의 전략 핵무기 감축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미국을 방문(4.24~27)하여 NPT회의에 참석하는데 이어, 클린턴 대통령,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양국간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미국의 NMD 구상은 ABM 조약 및 NPT합



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유럽 공동 미사일방어망 구상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러시아와 사전 협의를 거쳐 ABM 조약을 개정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NMD 구축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클린턴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6.3~5)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의 NMD체제 구축, 북한의 미사일 위협, 체첸 사태, 발칸반도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ABM조약 개정 필요성 및 러시아에 대한 금융지원 지지 입장을 설명하였으나, 푸틴은 ABM조약 개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미국의 NMD 구축 반대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향후 20년간 각각 34만 톤의 무기용 플루토늄 폐기, 전세계의 미사일 및 위성발사에 대한 자료교환 센터 설립 등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양국간 최대 현안인 ABM 조약 개정, START III 협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미·러 국방장관회담에서 코언 미 국방장관은 NMD 관련 기술공유를 제안하면서도 러시아 측이 제시한 유럽 공동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6.13)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미·러 정상회담 이후 아시아·유럽국가들을 방문하여 일련의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국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미국의 NMD체제 구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푸틴은 중·러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미국의 NMD구상 및 ABM조약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7.18)하였다. 또한 북한을 방문(7.19~20)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미·일의 NMD, TMD체제 구축을 저지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오키나와 G-8정상회담(7.21~23)에 참석하여 북한이 평화적인 우주탐사를 위한 로켓발사체를 제공받을 경우, 미사일 개발계획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공세에 중·북은 물론 유럽국가들도 동조하자 클린턴 대통령은 NMD 배치 최종결정을 차기 대통령에게 위임하기로 결정(9.1)하였다.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러시아는 구 소련 동맹국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무기판매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모색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10.2~5)하여 정상회담을 개최, 경제·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양국 정상은 ABM 조약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자력기술협력을 지속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1월초 러시아는 1995년 미국에 약속하였던 이란에 대한 무기수출 중단정책을 파기하고 재래식 무기를 계속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모스크바시 법원이 러시아의 고급 군사기술을 유출시킨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20년을 선고(12.6)함으로써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외교적 마찰이 심화되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쿠바를 방문(12.13~17),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ABM조약 개정 반대 및 미국의 국제질서 주도 반대입장을 천명하였다.

미국 대통령 선거(11.7)에서 당선된 부시 공화당 후보는 NMD체제 조기 구축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러시아가 ABM조약 개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NMD체제 구축을 강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2001년 1월 부시 공화당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미·러관계는 ABM조약 개정 및 NMD 구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도 집권 이후에는 선거공약과 달리 NMD체제 구축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침체된 국내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미국 측의 경제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미국과의 마찰을 증폭시키기 보다는 아시아·유럽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 실용주의적 외교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2001년에도 미·러간에 경색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양국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 (4) 일·중관계

2000년 중국과 일본은 외무장관 상호 교환방문과 주룽지 중국 총리 방일 및 군사 지도자 교류를 통해 '21세기를 향한 우호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일 군사동맹 강화, 양국의 군사력 증강, 과거사문제, 영해문제 및 대만문제 등이 양국관계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탕자쉬엔(唐家璇) 중국 외교부장과 고노 일본 외상이 5월과 8월 상대방 수도를 방문하였는데, 이를 통해 중·일은 21세기를 지향한 진정한 우호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국은 '구동존이'(求同存異, 이견을 덮어두고 공통점을 지향) 정신에 따라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룽지 중국 총리가 서울에서 개최된 ASEM회의를 앞두고 일본을 방문(10.12~17)하였다. 중·일 정상은 과거사문제, 대만문제 및 안보 갈등이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정상간 핫라인 설치는 그 구체적 조치의 하나이다. 일본은 베이징-상하이 간 고속철 사업 참여를 타진하고, 중국 내 투자환경 개선을 요구하였다. 중국 측은 일본이 중국 서부지역 대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양국은 관민합동협의회를 개최하여 중국 서부 대개발 사업에 대한 일본의 참여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중·일은 쌍무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양국 군대간 교류증대 및 군함 상호방문을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다. 「ASEAN+3」를 활성화하여 역내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데 합의하고,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한 정상회담이후 한반도 정세완화가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도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국 젊은 정치인간 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도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였다.

이에 따라 4월초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푸취엔요우(傅全有) 중국군 총참모장이 일본을 방문하였고, 10월에는 일본 항공자위대 참모장이 최초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11월에는 쑹팡카이 중국군 총정치부 부주임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방위청 사무차장과 제3차 안보대화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중·일간에는 군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양국은 상대방의 군사정책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정치·군사 역할증대 움직임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미·일의 TMD 공동 연구개발, 과거사문제 및 대만문제 등이 중·일관계 발전을 제약하였다.

2000년 일본에서는 모리 총리가 친황 중심의 강한 일본 건설을 주장하는 등 보수 우익세력의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일본은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군사 대국을 모색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유사법제 제정과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 필요성이 다방면에서 제기되었다. 12월에는 일본 내각회의와 안전보장회의에서 2001~2005년 중기방위력 발전계획이 통과되었는 바, 이 기간동안 일본은 25조 1,600억 엔을 투입하여 군사력을 발전시킬 전망이다.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하시모토파가 개헌 기본방침안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도록 하고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명시하였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개헌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내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일본이 대만해협사태를 포함한 일본 주변사태에 개입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당·정·군 언론매체와 지도부 교환방문 기회를 통해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비난하였다. 특히 중국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TMD체제를 연구개발하고, 대만까지도 TMD체제에 포함시키려는 데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본 역시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군사무기를 구매하고, 대만에

대해 무력위협을 가하는 등 지역안정을 저해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대중 엔차관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대중 엔차관이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면 일본 정부에게 대중 엔차관 사용내역의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결국 일본 정부는 대중 원조의 제공방법과 대상을 전면 수정한다는 기본 방침을 확정(5.22)하였는 바, 2001년부터서는 1년 단위로 원조규모를 결정하고, 지원분야를 환경보호와 인재양성 등 분야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대중 원조를 정치문제화 하지 말도록 요구하였다.

남중국해 지역의 영해문제 중 · 일간에 갈등이 빚어졌다. 보수 우익 단체인 「일본청년사」 소속 청년들이 조어도(釣魚島)에 신사를 설치(4.20)하고, 일본 외무성 관리가 조어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5.1)함에 따라, 조어도 영유권문제를 둘러싸고 중 · 일간 외교적 공방이 재개되었다.

1998년 리펑 총리 방일 시 체결된 신어업협정을 2000년 6월 1일부로 발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중 · 일은 동경 127도와 128도 사이의 중간선을 경계로 중국어민의 자유어업 범위를 설정하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연간 중국어선 수를 600척으로 제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중국 해양조사선이 일본 영해인 쓰가루 해협을 통과하는 등 일본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이에 일본은 170억엔의 대중 특별차관 승인을 보류(8.2)하였다. 고노 외상 방중 시(8.28~31)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사활동을 할 경우 사전통보하자고 제의하였고, 사전 통보제 논의를 위한 부국장급 실무회담이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중국 측의 미온적 태도로 실무회담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과거사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중 · 일관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 최고법원이 난징 대학살 사실을 폭로한 일본작가 東史郎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고, 오사카에서 일본 우익단체가 난징 대학살과 중국침략 사실을 부인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1.23)하였다. 이에 주룽지 중국 총리는 3월 전인대회의 시 극우세력이 중·일관계를 해치고 있다면서 일본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였다. 또한 일본 우익단체가 일본 문부성에 2002년도판 역사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난징 대학살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일본의 만주지배를 협약에 의해 추진하였다고 기술하는 등 기존의 역사교과서 보다 크게 후퇴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에 중국은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이 미흡하다면서 시정을 요구하였고, 중국언론들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실을 강력하게 공격하였다. 한편, 9월로 예정되었던 하지메 일본 운수성장관의 방중이 무산되었는데, 이는 그가 전범 위패를 안치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시하라 동경도 지사의 반중국 발언도 중·일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시하라는 육상 자위대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제3국인과 기타 외국인이 심각한 범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진이 발생하면 이들이 약탈을 감행할 수 있는 바, 자위대가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4.8)하였다. 또한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일본의 최대 위협국가이며, 중국이 여러 개의 작은 나라로 분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시하라가 밝힌 제3국인은 주로 일본 내 중국인을 지목하는 것이어서, 중국 내에서는 이시하라를 위시한 일본 내 보수 우익세력에 대한 비난여론이 형성되었다.

일본 우익단체가 리덩후이 대만총통의 일본방문을 초청하였는데, 중국은 이를 '두 개의 중국'을 조장하기 위한 음모로 간주하였다. 천지엔 일본주재 중국대사는 리덩후이의 방일을 허가할 경우 10월로 예정되었던 주룽지 중국 총리의 일본방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결국 중국정부의 반대로 리덩후이는 총통에서 물러난 뒤에도 일본을 방문하

지 못하였다. 일본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지지하고,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 중국의 읍서버 참가를 요청하였으나, 중국은 일본의 역할증대와 유엔안보리 기능 약화 우려 그리고 조기 개발도상국 지위의 포기를 원하지 않아 G-8 정상회담에 불참하였다. 또한 중국이 일본에게 중국 서부 대개발 사업 참여를 적극 요청하였으나, 일본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대한 우려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2001년 일본이 미국과 TMD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는 등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헌법 개정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중·일간 외교·안보적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중국 내 애국주의 강화 추세도 중·일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서부 대개발의 성공적 추진과 정치·군사대국화 실현 및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상대방과 협력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일은 지도부 교환방문과 안보대화를 통해 갈등 소지를 완화해 나갈 것이다. 2001년 상반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중·일간 경제무역관계는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 (5) 일·러관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과 모리 일본 총리의 취임 이후 일·러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방영토와 평화조약 문제, 경협 문제 등 현안 해결을 모색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일본의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였으나 북방영토 문제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의 러시아 정부가 2000년 말까지 체결하기로 약속한 평화조약 대신 일종의 '중간조약' 체결을 일본정부에 제의하였다고 보도(1.20)함으로써 양국간 불편한 관

계가 야기되었다. 이는 2000년 말까지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한 엘친과 하시모토 사이의 크라스노야르스크 합의(1997.11)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중간조약은 영토문제와 평화조약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기본 정책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모스크바 정상회담(1998.11)에서 국경선 획정과 평화조약의 분리를 제안한 바 있는 러시아는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미루려는 입장을 보여왔는 바,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중간조약' 제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부는 「산케이신문」이 전혀 뜻밖의 보도를 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설을 공식 부인하였다.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일본을 방문(2.10~11), 고노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가졌다. 이바노프는 양국간 건설적 동반자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의 친서를 오부치 총리에게 전달하였다. 양국 외무장관은 평화조약 체결, 경험 확대, 극동지역 안보문제 등을 토의하고,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3.26)된 직후, 일본 정부는 양국간 오랜 현안으로 남아있는 북방영토 문제를 조기에 타결 짓기 위하여 대러 유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오부치 총리가 타개한 후, 모리 신임 일본 총리는 첫 기자회견(4.5)에서 대러시아 정책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최초의 외국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했다. 양국 정상회담 직전 일본 의원협회 대표단이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들과 접촉(4.16~20)하여 평화조약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페테스부르크에서 푸틴과 모리 총리간 비공식 정상회담이 개최(4.29)되었다. 모리 총리는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자와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대러관계에서 중요한 과제인 평화조약 체결을 희망하였다. 푸틴도 일본과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의 유지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우호적인 회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최대 현안인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고, 단지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양국이 적극 노력한다는 점만을 합의하였다. 푸틴은 대통령 취임(5.7)이후 일본 「후지 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7.4)에서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하고 일본의 정치적 역할증대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오키나와 G-8 정상회담(7.21~23)에서의 합의에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방문(9.3~5)하여 아키히토 천황을 예방하였다. 그는 모리 총리와 두차례 정상회담(9.4)을 갖고 양국간 통상과 경제협력 강화, 국제무대에서 양국 공조, 평화조약 체결 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나 북방영토와 평화조약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모리 총리는 하시모토 전 총리와 열린 전대통령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합의를 지키고 싶다고 말하고 북방 4도 북쪽으로 국경선을 확정하되 당분간 러시아의 시정권을 인정한다는 기존 제안을 되풀이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모리 총리의 발언이 러시아 측 생각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해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였으나, "만약 평화조약이 체결될 경우 하보마이 섬과 시코탄 섬을 일본측에 돌려준다는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였다. 모리 총리는 답방 형식으로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북방영토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 등에 푸틴 대통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방리를 취소하였다. 그 대신 고노 외상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의 전략적, 지정학적 협력관계와 광범한 경제협력, 평화조약 체결 등의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리 총리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친서를 전달하였다.

안보면에서 일본 정부는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일시(2.10~11)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무장편제에서 제외되는 원자력 잠수함들의 재 활용 비용으로 1억 2,000만 달러를 러시아 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국,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안보·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방일시(9.3)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환, 군고위급 접촉 등을 추진하고 미·일의 TMD와 NMD 체제 등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의 노후 핵잠수함 해체와 폐 플루토늄의 안전한 제거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제면에서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방일시(2.10~11) 고노 외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이바노프가 방일 직전 평양 방문중 구소련 시대 건설된 북한 내 기업들의 현대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러시아 자체의 재정문제로 북한에 구체적인 지원약속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대러 총 투자액은 3억 4,720만 달러로 일본이 10위 투자국이며, 극동지역에 약 300개를 포함, 380개의 일본 기업이 현재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의 방일시(9.3) 그는 러시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극동지역에 대한 일본의 투자 확대를 요망하였다.

모리 신임 일본총리의 취임과 푸틴 신임 러시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호관계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주요 수출자원인 석유와 천연가스의 새로운 판매시장을 모색중이고, 일본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2001년에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협력과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일·러 양국의 공동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외교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

2001년에도 양국 정상이나 고위급 회담에서 북방영토 및 평화조약 체결과 관련된 원칙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과 북방영토 문

제의 동시 해결을 촉구하는 반면, 러시아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분리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입장차이로 일·러 양국간 경제협력도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6) 중·러관계

2000년 중·러는 상하이 5개국회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방문, 리펑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러와 카시아노프 러시아 총리 방중 및 군사교류·협력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중·러는 미국에 의한 세계 패권질서 구축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서 다극화 질서 구축을 주장하였으며, 미국의 NMD, TMD 구상을 반대하고 ABM조약 개정 반대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러시아가 금융 위기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중국이 서부 대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양국간 경제교류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중·러 사이에 안보협력이 강화된 주요 이유는 세계 신질서 구축에 대한 양국의 공통 인식,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반대입장, 첨단 군사 무기장비 거래 필요성, 민족분리주의·테러·종교문제에 대한 일치된 입장에 기인하였다.

미국의 패권질서에 대한 반대 입장은 상하이 5개국회의(7.5)와 푸틴 방중(7.17~19) 시에 강력하게 표명되었다. 타지크스탄 두산베에서 개최된 제5차 상하이 5개국 정상회담에서 중·러는 "세계 신질서 구축과정에서 다극화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국제정세 안정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국제무대에서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력사용에 반대하며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엔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나토 신전략개념'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푸틴 방중 시 채택된 「베이징 공동선언」에서 양국은 선린우호 협력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고 세계질서 다극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러 정상은 유엔 안보리의 권위 유지와 국제법 원칙 준

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이 NMD, TMD 연구·개발을 지속함으로써 중·러간 안보적 이해관계가 더욱 심화되었다. 중·러는 미국이 NMD, TMD 구상을 실현하게 될 경우 자국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되고 군비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에게 NMD, TMD 구상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중·러는 「전지구 위치표시 시스템」(GPS) 공동 이용에 합의하고, 사이버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제55차 유엔총회에서 「ABM조약 준수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에 NMD, TMD 구상의 위험성을 환기시켰다. 또한 대만을 TMD 체제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러시아가 적극 지지함으로써 중·러간의 안보적 신뢰가 한층 강화되었다.

대만문제와 체첸사태 등 민족분리주의 문제에 대한 상호 지지 입장도 중·러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베이징에서 개최된 탕자쉬엔 외교부장과 미로노프 러시아 인권대표간의 회담(3.15)에서 양국은 인권의 이름으로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중국측은 체첸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이에 러시아도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미국이 제출한 「반중국결의안」이 가결되지 않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상하이 5개국회의에서도 양국은 "인권문제는 각국의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구실로 타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푸틴의 중국방문 시 러시아는 대만문제에 대한 '4불일장'(대만독립 반대, 두 개의 중국 반대,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반대,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 반대)을 재천명하고, 중국은 체첸문제가 러시아 내정문제이며 러시아의 민족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탄압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러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첨단 군사무기 장비 거래 등 군사교류·협력이다. 츠하오텐 중국 국방부장(1월), 클레바노프 러시아

방위산업 담당 부총리(3월), 쉬차이호우(徐才厚) 중국 중앙군사위원회(6월), 세르기에프 러시아 국방부장(7월) 등 군사지도자 상호 교환방문이 이루어졌으며,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제1차 5개국 국방장관회담 참석을 계기로 회담(3.31)을 가졌다. 특히 츠하오텐 국방장관 방러 시 양국은 '군사협력 확대에 관한 비망록'을 교환하였는데, 여기서 양국은 군사정보 교류기구 설치, 전투기·함정·미사일 등 러시아제 첨단무기 제공, 합동군사훈련 강화, 향후 15년간 군사 무기장비 공동개발 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최첨단 군사무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1월 8억 달러를 지불하고 신형 구축함 2척을 구매하였고(1척은 1월 인도), 키에프급 구형 항공모함을 도입하였으며, SU-30 전폭기 구매 및 라이선스 생산기술 인도에 합의하고, R-77 공대공 미사일 100기 구입 및 관련기술 인도에 합의하는 한편, SS-N-22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24기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의 반대로 이스라엘과의 조기 공중경보기 구입 협상이 결렬된 뒤, 2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제 A-50 조기 공중경보기 4대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이 공중경보기는 3년 내 인도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무기수출 대상국이며, 중국 내 연구소에 2,000명에 이르는 러시아 군사기술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0년 중·러는 경제·문화분야에서도 협력관계를 확대하였다. 상하이 5개국회의시 중·러 정상은 양국관계가 정치·경제·문화 등 전분야에서 '진정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푸틴 방중 시 양국은 에너지협력을 지속하기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양국 중앙은행간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약속하였다. 리펑 방러 시에는 양국 의회간 협력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하는 동시에, 양국 기업·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중국의 서부지역 대개발 사업에 러시아의 참여문제가 논의되었다. 리펑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중국 전인대와 러시아 두마간에 협력협정이 체결되었으며, 러시아 두마에 '러·중 우호소조'가 설치되었다. 또한 2000~2002년 교육협력문제도 진전을 보았다.

스광성(石廣生) 중국 대외무역경제부장 방러 시 중·러는 고기술상품 개발과 교역,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이용, 투자와 경제기술협력 강화문제 등을 논의하고, 무역질서 관리, 무역결제 및 보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카시아노프 러시아 총리가 제5차 중·러 정기 총리회담차 중국을 방문(11.3~4)하였는데, 러시아는 중국에 발전설비, 조선, 천연가스관, 원유, 정제유관 등 수입확대를 요청하고, 중앙아시아·동남아·남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운송로를 공동으로 건설하고자 제의하였다.

이로써 중·러간 무역거래가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2000년 상반기 양국간 교역액이 35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5% 증가하였다. 러시아의 주요 대중 수출품목은 화학비료, 철강재, 정제유, 아연, 목재 등이고,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품목은 의류, 신발, 식품 및 전자제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1,300개의 중국기업이 러시아에 1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러시아는 중국에 2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2001년 미국이 NMD와 TMD구상을 지속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중·러간 안보협력 강화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의한 단극질서 구축을 견제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방러, 제6차 상하이 5개국회의 개최 및 제2차 5개국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중·러간 안보협력관계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장쩌민 방러 시 '선린 우호협력조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러간 경제교류도 중국의 서부 대개발 사업추진에 따라 확대될 전망이다.

## 2.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 가. 한·미관계

한국과 미국은 페리보고서 발표('99.9.15)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미·북관계 개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등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였다. 또한 대북정책이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양국간에는 대북정책의 우선 순위 및 주한 미군의 지위문제에 관한 입장차이가 노정되었는 바, 이를 좁히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요청해 오면 농업구조 개선 지원을 비롯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베를린선언을 발표(3.9)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북접촉을 적극 추진하였다. 조성태 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3.18)하고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발표(4.10)하자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논의가 등한시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관의 서울 방문(5.10) 시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미국·일본이 협의해 온 현안들이 적절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6.13~15)하고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교류·협력 활성화, 남북 당국간 대화 개최 등에 합의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

고 남북한 긴장완화를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남북 화해분위기로 인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간 후속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6.23)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전쟁억지력과 지역안정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철군이나 감축은 시기상조이며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주장하였다. .

김대중 대통령은 6·25 50주년 연설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안보균형자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철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음을 천명(6.25)하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한국은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이 미국·일본의 대북관계 개선과 조화·병행하여 추진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과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시켰다. 한국·미국·일본의 고위급 대북정책 협의회인 「3자 조정·감독그룹」은 호놀룰루에서 회의를 개최(6.29~30)하여, 남북대화가 한반도 평화·안정에 핵심적이며, 남북대화의 정례화, 공동선언 5개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6·15공동선언」을 설명하고 남북한이 평화공존의 새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천명(9.6)하였다. 아울러 클린턴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9.7)하여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설명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미·북관계 정상화를 권유하였고, 앞으로도 한·미공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서울에서 제3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개최(9.21)하였다. 양국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고 한·미간의 주요 안보현안을 동맹정신에 입각해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전환기적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동맹관계 발전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을 위해 남북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 회담 이후 매향리 미공군 폭격훈련장 주변의 소음 공해,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인한 일부 주민들의 반미감정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양국정부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8.2~3)한 후 4차례의 협상을 통해 이를 전격 타결(12.28)하였다. 양국은 살인·강간·방화·마약거래 등 12개 중요 범죄에 대한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기를 현행 '재판 종결 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미군의 한국 환경법령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조항을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의사록에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환경보호 협력조치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환경조항 신설에도 합의했다.

2001년에도 한·미 양국은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한편,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한·미간에는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견해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하여 미·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공화당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유향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북협상에서 엄격한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북협상 방식, 대북 경제지원, 미·북관계의 개선 속도 등에 관한 양국간 견해 차이를 좁히는 데 상당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한·일관계

2000년 한·일 양국은 수차례의 정상회담과 각료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대북공조 재확인, 경제협력 그리고 문화교류 등에서 진전을 이뤘다.

김대중 대통령과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개최(5.29),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김 대통령은 북·일관계 발전이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천명하였으며, 모리 총리는 북·일 수교교섭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일본이 대북 수교교섭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한·일 정상은 상호 투자협력 촉진을 위한 한·일 투자협정 교섭의 조속한 타결, 2002년 월드컵에 따른 서울·도쿄간 항공노선 증설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 대통령이 제일 한국인의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모리 총리는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는 9월 24일 또 한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정책을 조율했다. 김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려울 때 일본이 식량지원에 나서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 식량지원을 촉구했고, 이에 모리 총리는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두 정상은 북한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협력하고, 북한 내 전력·철도·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는 바, 북·일 수교가 이루어지면 일본이 북한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보상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통령은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가진 일본 경제인 초청 만찬에서 가까운 나라끼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

해 일본 경단련과 한국의 전경련이 협력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김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 확대를 촉구하고, 한·일간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의 해소 등을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부품과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70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 문화인 간담회 연설을 통해 "일본 문화에 대한 개방이 거의 전면적으로 실현돼 이제 방송분야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월드컵 공동개최와 더불어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는 한편,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 이전까지 일본 공중과 방송도 개방할 계획을 천명하였다.

국제무대에서도 한·일간 협력이 확대되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회동하여 남북관계 개선문제와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하였다.

한편, 모리 총리의 신국(神國) 발언(5.15)과 역사교과서 개정문제 등으로 인하여 한·일간에 다소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모리 총리는 "충분한 뜻을 밝히지 못해 오해를 준 데 대해 반성한다"(5.30)는 입장을 천명하였으나, 일본 내 보수우익화 경향은 한·일관계 진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 내 보수우익화 경향을 감안할 때 과거사 문제가 앞으로도 한·일 관계를 냉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두고 한·일간 교류·협력 분위기가 확대될 전망이다.

## 다. 한·중관계

2000년 한·중관계는 수교 8주년을 맞아 '전면적 협력관계'로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9년 조성태 국방장관의 중국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츠하오텐 중국 국방장관이 최초로 한

국을 방문하였고, 한국 합참의장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6.25 참전 중국군 부대를 시찰하였다. 이는 한·중관계가 기존의 경제·문화 중심의 관계에서 안보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이루어진 주룽지 중국 총리의 서울 방문시 양국관계를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방중 시 합의된 '협력동반자관계'에서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한·중관계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사실은 츠하오텐 중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1.19~23)하여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는 것이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을 방문,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 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한·중 국방장관은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에 합의하고, 양국 국방대학생 교환 및 체육교류를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국 국방장관간의 합의에 따라 조영길 합참의장의 중국방문이 성사(8.28~9.4)되었다. 조 합참의장은 6.25 당시 한국전에 참전하였던 제39집단군 예하의 116 기계화보병사단을 방문하고, 연합 해상구조훈련과 군 인사교류 확대 등 군사교류 및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한·중간에는 고위급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쟁칭홍(曾慶紅) 중국공산당 정치국후보위원(4.1~4), 자오난치(趙南起) 정치협상회의 부주석(4.24~5.3), 주룽지 국무원 총리 등이 한국을 방문하여 정치 및 경제관계 발전문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주룽지 총리 방한시, 중국은 한국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고, 남북간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중국내 CDMA사업에 한국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한국과 스와프계약을 조기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동시에, 무역 확대 및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한국 내 중국문화센터 설치, 범죄인 인조조약 서명, 2002년을 '한·중 국민교류의 해'로 지정하는 등의 성과

도 거양하였다.

부르나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시 한·중 정상회담(11.15)이 이루어졌는데, 장쩌민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정에서 중국이 행사한 역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미, 북·일관계 등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중국의 이러한 한반도정책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미간 고위급 접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한·중관계가 진전되었으나, 몇 가지 현안이 부각되었다. 1월 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중국은 국제관계와 인도주의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고려하여 탈북자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보지 않고 불법 입국자로 간주하여 북한에 송환하였다. 이후 한·중은 탈북자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고위급 상시채널을 가동하기로 하였는 바, 장재룡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조리 사이에 첫 번째 회담이 개최(2.2~4)되었다.

경제교류 확대에 따라 무역마찰이 심화되었다. 중국산 마늘 수입이 급증하자 1999년 11월 한국은 중국산 마늘에 대해 315%의 긴급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중국은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전화기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발표(6.7)하였다. 마늘문제로 인하여 한·중간 무역마찰이 심화된 이유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중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한·중간 교역에서 한국이 94억 달러 흑자를 보았으며, 2000년 무역역조 폭은 더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이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3.10)함으로써, 중국은 석유화학, 철강, 건설장비 등 한국산 162개 품목에 일반관세율 보다 15.9% 낮은 특별세율을 부과하게 되고, 한국은 섬유류와 피혁 등 중국

산 22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30% 인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중국은 한국에 무역역조 해소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어업협정체결문제도 한·중관계 진전에 장애가 되었다. 1999년 3월 중국이 「조업금지수역법」을 국내법으로 제정하여 양자간 하구의 광범위한 해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을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1998년 11월 가서명된 어업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여 어업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한·중은 우여곡절 끝에 양자간 수역문제를 타결하고 어업협정을 체결(8.3)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한·중은 EEZ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규정된 구역에서 어획을 하되, 유엔해양법상의 EEZ 제도에 의해 어업문제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달라이 라마의 한국방문과 서울-타이페이간 국적기 운항재개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간 외교마찰이 제기되었다. 중국은 한국이 달라이 라마의 서울방문을 허용할 경우,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압력을 가하였다. 중국은 한·대만간 국적기 운항 재개가 한국과 대만간 정치관계 복원으로 발전될 것을 우려하였다.

2001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고 상하이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바, 한·중간 정치·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희망하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서부 대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여, 한·중간 경제교류·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달라이 라마의 방한문제와 한·대만간 국적기 복항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 라. 한·러관계

한·러는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상회담, 총리회담, 외무·국방장관 회담 등을 개최하고 기존의 상호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전방향을 협의하였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엘친을 승계한 푸틴 대통령은 양국간 건설적 협력을 다짐하고 동반자관계의 심화·발전을 기대하였다. 안보면에서 양국간 군사교류와 협력이 강화되었고, 방산·군수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경제면에서는 실적이 저조한 양국 교역과 투자 증진 방안이 협의되었고, 푸틴 신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엘친 대통령의 조기사임('99.12.31)에 대해 한국은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1.1)을 통해 그가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증진에 기여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한반도 주변 4국과의 전반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 방침에 따라 장재룡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러시아 외무부 로슈코프 아태 담당차관 내정자 및 카라신 차관을 만나(3.20) 수교 1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의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측의 협력 방향을 협의하였다. 한국은 러시아 대선(3.26)에서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선된 것을 축하하고 그의 강력한 영도력 하에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나가기를 기원하였다. 또한 그의 당선을 계기로 양국간의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러시아는 주변국의 개입 없이 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직접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크게 만족하였다. 이는 주변4국 중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해 가장 적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직후,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러간의 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새로이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러시아를 공식 방문(6.28~29)하여 이바노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은 양국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① 양국관계 평가 및 향후 한·러관계 발전방향 협의, ② 남북정상회담 결과 지지 및 계속적 협력 약속, ③ 한·러간 고위급 정치대화 증진, ④ 푸틴 대통령의 연내 방한 확정, ⑤ 김 대통령 방러 후속조치 독려, ⑥ 수교 10주년 기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유엔 정상회의의 참석 중 김대중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9.8)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및 경험 활성화 등 한·러관계 강화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방문(7.19~20) 결과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설명하였다. 양국 외무장관은 지난 10년간 양국 관계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수교 10주년(9.30) 기념 메시지를 교환하였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10월 방러 시 푸틴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국내언론들이 한국 정부의 대리정책을 문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카시아노프 총리와 한반도 문제 등 양국간 현안에 관해 광범위하게 협의하였고, 브루나이 APEC 정상회의에서 한·러 양국 정상은 푸틴 대통령의 2001년 상반기 서울 방문에 합의하였다.

안보·군사면에서 주변 4국과 정기적인 군사문제 협의채널을 수립 중인 한국 정부는 모스크바에서 제1차 한·러 군축·비확산 협의회를 개최(2.17~18)하였다. 동 협의회에서는 미사일 비확산 등 대량파괴무기의 군축·비확산, 대인지뢰 및 소형무기 문제, 대량파괴무기의 군축·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참여유도 방안이 논의되었다. 러시아 하원 국



가두마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 비준동의안 채택(4.14) 및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동의안 채택(4.21)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이를 환영하며 추가 핵무기 감축을 위한 START III 협상의 조속한 개시와 인도, 파키스탄, 북한의 CTBT 가입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한·러 국방부간의 제3차 국방정책 실무회의(4.25~26) 및 조성태 국방장관과 세르기예프 러시아 국방장관간의 회담(5.16)이 각각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양국 국방장관은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정세 관련 상호 공동 관심사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고 양국 군사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① 양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서간 긴밀한 대화 유지, ② 한국 해군과 러시아 태평양 함대간 긴급연락체제의 적극 활용, ③ 양국 군 지도급 인사교류의 지속, ④ 양국간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⑤ 러시아 군사교육기관에 한국 학생장교 파견교육의 확대, ⑥ 10월 강원도에서 주최하는 「세계 평화 팡파르」 행사에 러시아 군악대 참여.

또한 한·러 양국 차관간 「상호교환방문 합의각서」(’98.5.29)에 따라서 한국군 사절단이 러시아를 방문(5.17~27)하였고,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부부 16명으로 이루어진 러시아 군의 친선사절단이 방한(6.20~29)하였다. 러시아 사절단은 국방부 차관과 육사, 해사 및 해군 작전 사령부를 예방하고 서울, 부산, 제주도 등 주요 고적지 및 산업·관광지를 방문하였다. 2000년 한·러간 군사관계에서 가장 큰 의의는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군사기술·방산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양국 정부간 「군사기술·방산·군수 협력협정」(’97.11)에 의거 문일섭 국방차관과 러시아 산업과학기술부 라포타 제1차관이 대표로 참석하는 제1차 「한·러 군사기술·방산·군수 공동위원회」 회의가 한국 국방부에서 개최(11.23)되었다. 양국은 군사기술·방산 협력 업무 절차와 획득업무 제도를 확인하였고, 러시아 대표단은 방산업체를 방문하였다.

경제면에서는 수교 10주년 기념 및 푸틴 신정부 출범이후 경제회복이 핵심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 러시아를 방문(6.19~21)하여 외교통상부와 러시아의 전략문제연구소 및 모스크바 국립경제대학이 공동 주관하는 한·러 경제세미나(한국경제의 현대화: 러시아에 대한 교훈)에 참석하였다. 그는 러시아 경제개발·통상장관, 에너지 장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러시아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경험 활성화, 양국간 무역·투자 증진 및 중소기업협력, 민간 경제협력위 설립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제4차 「한·러 문화공동위원회」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2.14)되어 양국은 문화·예술, 과학·교육, 대중매체, 체육·청소년·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의 우호증진 및 양국민간의 이해를 심화해 나가기 위해 2000~2001년 2개년간의 문화교류 계획서를 채택하였다. 특히 모스크바에서 '한국주간' 개최, 수교기념일에 모스크바에서 한·러 합동음악회 개최, 볼쇼이 오페라 내한 공연 등 수교 10주년 기념행사 문제를 집중 협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또한 수교 10주년을 맞이해 최초로 한·러 2개국어로 발행되는 한·러 관계 전문 격주간지 「한·러 포럼」이 모스크바에서 창간(3.29)되었고,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러시아 외교아카데미」가 공동 주최하는 양국의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 주요 인사들의 연례 대화 채널인 「한·러 포럼」 제2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9.28~29)되었다.

2001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취임이후 최초로 방한할 예정이다. 이때 체결될 약 10개의 양국간 협정들을 조율하기 위해 양국 경제공동위원회가 2001년 2월 초에 개최될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의 방한 중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양국 경제협력, 남북한 철도의 시베리아 철도와의 연결 사업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 하의 러시아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러 양국간의 협력관계 전망도 밝다고 평가된다. 다만 한·러 양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남북한과의 3각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 2기가 본래 계획대로 2003년까지 제공되지 못하고 2008~9년에야 완공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경제실익을 얻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KEDO 참여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 II. 북한정세

### 1. 대내정세

#### 가. 정치동향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지난 10년간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생존과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한 남북관계개선, 핵카드를 통한 대미관계개선과 남한배제, 국제사회에 대한 식량난 호소 등 다양한 전술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대외적 전술과 태도는 매우 유연했던 반면, 대내적으로는 사상, 당, 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관성을 보였다. 특히 1998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강성대국'의 구호는 북한의 대내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000년 북한의 대내정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첫째, 2000년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은 2000년을 "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고 선언하고, 조선중앙방송은 "2000년은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대국 건설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은 세계적인 기적의 해"라고 평가하였다(10.10).

특히 조선중앙방송에서 2000년을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를 고수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노예가 되느냐 하는 것을 판갈이하는 결사전의 연대였다"고 회고한 뒤 "고난의 행군에서 역사적 승리가 이룩된 오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주장하였다(12.27).

둘째, 북한은 '선군정치', 즉 군사우선주의만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결정적 담보'라면서 인민군대 강화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당창건 기념일에서도 인민군을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규정하는 등 선군정치의 지속을 강조하였다. '선군정치'의 상징으로 군간부들의 상위권력서열 독점이 지속되었다. 조명록(3위)을 비롯하여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 전병호 등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10위 이내에 포함되었으며, 백학림 등 나머지 국방위원 등도 전원 20위내에 들어갔다.

셋째, 북한은 예년과 다름없이 김정일의 권위제고를 위한 위대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휘하게 된 근본요인을 당의 '세련된 영도', 즉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독특한 통치형태 덕택으로 규정함으로써,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력을 미화하였다. 특히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김정일을 '21세기의 수령', '통일대통령' 등으로 호칭하면서 김정일의 권위를 강화시키려는 작업을 하였다.

넷째, 1998년 헌법개정 시 인민무력성으로 개칭되었던 인민무력부를 다시 인민무력부로 재개칭(9.9)하였다. 이는 국방위원회에 속해 있는 무력기관을 내각의 성과 명백히 구분하여 군부 위상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군사력 강화의 명분이 약화됨으로써, 군부의 동요를 예방하고 군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국가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이 2000년에도 확인되었다. 최고인민회의의 10기 3차회의가 개최(4.4~7)되어 작년에 이어 예산을 심의하고,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개칭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주목할 만한 안건이 없었던 것은 대내외적으로 특별한 정책 변화 없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고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최고인민회의는 개최되었지만 당진원회의는 열리지 않는 등당의 파행운영은 지속되었다. 특히 김정일이 정상회담 이후 노동당 대회의 개최가능성을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7차 당대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재원부족으로 인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등 청사진 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남한 적화노선에 대한 노동당규약의 수정이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치적 고려도 있었을 것이다.

2001년 북한은 정치부문에서 김정일 중심의 권위구조를 보다 공고히 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지만, 정치적 안정과 통합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정일은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하는 데 성공했으므로, 앞으로는 상징에 의존하기보다는 구체적 업적과 성과를 통해 정당성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일의 대내적 위상이 제고되었는바,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그의 새로운 지도자적 이미지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연방제 통일론을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김정일을 연방제 통일국가 실현의 선구자로 묘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일은 업적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자 경제제건에 힘을 쓸 것이며, 대내 활동 중에서 경제관련 현지지도의 비중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공동사설에서 2001년을 '21세기 경제강국건설의 새로운 진격의 해'로 설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

런, 김정일은 에너지 및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현장과 모범 협동농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북한은 체제안보 및 정치적 안정을 위해 예년처럼 선군정치 기치 하에 군대우선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 생전 시 구호였던 노동자를 대표로 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잠시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정치체제가 일시적이거나 사회주의 과도기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대신에 군부가 노동당과 함께 통치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김정일의 서울 답방과 대미 미사일협상 등 현안들로 인해, 북한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시도할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02년이 주체 90년(김일성 탄생 90주년)임을 감안할 때, 제7차 노동당 대회가 2002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제7차 당대회 준비의 일환으로, 2001년에는 노동당, 내각, 외곽단체 간부 및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사상검토를 조용히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다.

## 나. 경제동향

기후조건의 악화로 인해 2000년 북한의 곡물생산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한국으로부터의 비료와 곡물지원, 국제사회의 지원,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대외무역 증가 등에 힘입어 1999년도에 이어 북한경제는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도 공동사설은 "우리의 경제는 의연히 어렵다"고 자인하고 당면 경제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던 데 비해, 2001년도 공동사설은 강성대국론의 구체적 요소로 '국가경제력'을 제시하고, 사고방식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김정일식 경제정책 노선을 추진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북한은 2000년도에 경제회생을 위해 중소형발전소 건설, 토지정리사

업, 감자재배 및 두벌농사 면적 확대, 생산조직의 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에 주력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부문 현지도도 활동도 증가하였다. 2000년 12월 현재 김정일의 총 73회의 공개활동 중 경제부문이 25회를 차지함으로써 1998년의 11회, 1999년의 23회에 비해 증가한 반면, 군관련 공개활동은 1999년의 41회에서 21회로 감소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의 경제부문 현지도는 주로 토지정리사업 현장, 농장, 양어장, 목장 등 농업과 먹는 문제에 관련된 장소였다. 한편 북한내각은 총 5장 72조로 된 노동규율 규정과 7장 66조로 구성된 지방예산 규정을 승인함으로써 경제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2000년 들어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군인들을 각종 경제 건설에 투입했다. 군부대 자체 전력 수요 충족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해 부남 2호 발전소와 군민 용산발전소 등이 건설되었으며, 1천명의 제대군인들이 감자 증산을 위해 양강도 포태 종합농장에 투입되었다.

한편 '제2의 천리마대고조'를 강화하고 '강성대국' 건설노선을 견지하자는 내용의 「전국선동원대회」(3.24~25), 공업설비 관리운동인 「전국26호모범기대창조운동 선구자대회」(4.27~28) 외에는, 다른 해에 비해 대중동원을 통한 경제건설 선동대회 횟수는 감소하였다. 이는 북한이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적 정책노선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 회의(4.4)는 1999년 국가예산 집행결산 및 2000년 예산안을 채택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교육법, 대외중재법, 민용항공법을 승인하였다. 2000년도 국가예산 수입과 지출은 각각 204억 532만 북한'원'(약 94억 5,000만 달러 상당)으로 수입은 전년대비 3.1%, 지출은 전년대비 1.9% 증가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1999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전력, 농업, 석탄, 철도운수, 금속부문 등 기간산업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이 각각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농업과 경공업부문이 각각 5%, 4% 증가한 반면, 전력공업과 석탄공업부문의 투자는 각각 15.4%, 12.3% 증가됨으로써, 북한이 극심한 에너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도에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 및 태풍 등 기상조건의 악화와 영농원자재 공급 부족 및 농업기반 시설의 낙후 등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북한의 곡물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방문결과(2000.10.14~21)를 토대로 작성된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식량계획(WFP) 북한조사단의 평가에 따르면 2000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정곡기준 292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WFP/FAO 조사단은 최소 칼로리 기준으로 2000/01년도 북한의 양곡 수요를 478.5만 톤으로 추산하고, 부족분을 186.5만 톤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상업적 수입 예상치 20만 톤, 한국의 식량차관 및 지원 60만 톤, 일본 지원 50만 톤으로 부족분의 상당량을 충당함으로써 식량수급 상황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감자농사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두벌농사와 종자혁명을 추진하면서, 전국각지에서 토지정리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북한은 공업생산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동력, 운송 및 금속부문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고 있는데, 전력공업과 석탄공업,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과 중소형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 「중앙방송」(10.5)은 2000년 들어 10월까지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했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신보」(11.17)는 북한이 당장건 55돌을 맞아 대규모 발전소인 안변청년발전소의 제2단계공사, 태천발전소 5호발전소, 내평발전소와 이 보다 작은 규모의 흥주발전소, 하창청년발전소, 황해제철소발전소, 봉화화학공장화력발전소 등이 완공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은 2000년에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강조하면서 향후 경제발전전략으로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며, 2001년도 공동사설에서도 기술재건을 경제부문의 최우선적 과제임을 밝혔다. 특히 첨단과학부문의 연구를 중시하고 있는데, 민주조선(10.5)은 북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당창건 55돌을 맞이하여 60여건의 첨단 과학연구과제를 앞당겨 완성하였다고 보도했다. 연구과제는 생산공정의 자동화장치 집적회로용 첨단전자재료 생산 기술, 컴퓨터 및 프로그램 개발과 생물공학부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1월 연합기업소, 종합기업소, 연합총국 등 종합적인 40여개 생산조직을 일반 공장, 기업소, 관리국체제로 개편한 이래 9월부터는 다시 금속·기계·화학 등 중공업부문의 김책제철소, 대안중기계 공장, 남흥청년화학공장 등 20여개의 대규모 산업시설을 연합기업소 체제로 환원시켰다. 이는 연합기업소의 단위이기주의를 척결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연합기업소를 해체했으나, 다시 부품 및 원부자재 공급의 어려움 등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생산효율의 저하라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에도 실험단계를 거쳐 지속적으로 공장, 기업소의 생산성 향상과 채산성 제고를 위해 산업조직의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은 1999년도의 14.8억 달러에 비해 상당폭으로 증가하여 20억 달러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상반기 동안 북·일 교역액은 전년대비 약 48% 증가하여 5년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북·중 교역액 역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다. 특히 북한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식량난 완화와 산업구조 정비 및 위탁가공 교역 증대를 통한 산업가동률 제고, 남북교역 확대 및 현대의 금강산 사업 등을 통한 외화수입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001년도 공동사설에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 것 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의 전개에 부합하는 경제력 회복에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식량난이 완화됨에 따라 '생존'보다는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정책 우선 순위를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에는 김정일식 새로운 경제정책 노선의 가시화 및 정책변화 속도의 가속화가 예상되며,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001년도 공동사설과 김정일의 중국 방문(2001.1.15~20)을 통해 중국의 경제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혁신의 필요성과 경제관리체제의 개선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신속한 변화를 희망하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북한은 2001년도에 경제부문에서 혁신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농업부문의 초보적 개혁과 기업경영조직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의 정책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단위 중심의 영농구조 개혁과 공업기업소의 지배인 책임제와 같은 실험적 조치들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내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북한 원화의 평가절하 및 기존 국정가격체계의 정비, 일부 소비재 경공업품에 대한 시장가격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중국 및 EU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수출시장 확보와 기술·자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신의주 등지에 시장기능이 강조된 경제특구를 건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경제특구로는 중국경제와의 연계성(수출입 및 기술·자본 유입)을 지닌 신의주가 가장 유력하며 남북경협을 위해 남포 및 개성공단도 경제특구에 포함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해 식량과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선별적으로 남북경협을 확대시키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 사회동향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및 당창건 55돌을 맞이하면서 북한은 2000년에도 사상교양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였다. 남한과의 교류 확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서구 국가들과의 수교 정상화에 따른 외부 사조의 유입에 대비하여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선전사업을 지속하였고, 동시에 다양한 사회집단의 집회를 개최하여 사상교양을 강화시켜왔다.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상통합의 바탕은 기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국주의를 독약으로 규정하고, 제국주의 사상의 문화적 침투를 경계할 것을 주민들에게 촉구하였고(「중앙방송」, 2.6), 그 동안 지속하여왔던 제2천리마운동과 자력갱생으로 '난국을 뚫고 나가는 총진군 운동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로동신문」, 1. 31). 또한 2000년과 마찬가지로 자력갱생을 중시하는 강계정신을 강조하였고(「로동신문·근로자」 공동사설, 4.22), "당에서 수령의 영도적 지위는 수령이 서거했다고 결코 달라질 없다"(「중앙방송」, 10.2)며 김정일을 중심으로 뭉칠 것을 주장하였다.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는 각종 군중집회의 시작은 1월의 신년 공동사설 관련 쉼기 모임이었다. 북한은 평양(1.4) 및 인민무력성(1.4)을 필두로 각 지역과 집단별로 공동사설에서 제기된 과업의 관철을 촉구하였다. 뒤를 이어 모범 선동원과 각급 당선전 일꾼 등이 참여하는 제3차 전국 선동원대회가 개최(3.24)되었고, 직총과 직맹의 주요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직업총동맹의 제41차 및 제4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4.25; 8.3). 또한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제20차 전원회의(7.3),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 제38차 전원회의(8.1)가 개최되어 사상적 결속 강화가 시도되었다.

군중집회와 더불어 사상통합을 위하여 3대혁명 붉은기와 영예 붉은

기 수여 등 각종 포상제도도 활용되었다.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75개 공장·직장 등에 3대혁명 붉은기, 18개 학교에 영예 붉은기가 수여되었다. 11월까지 총 600여 개 기관 및 단체가 3대혁명 붉은기를 수여 받았는데 이 가운데 75개는 두 번째로 3대혁명 붉은기를 수여 받은 「2중 3대혁명 붉은기」 단체였다.

사상적 동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청소년 세대에 대한 관심은 2000년에도 여전히 높았다. 북한은 "새 세대들에게 혁명전통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그들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장군님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싸워 나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중앙통신」, 6.1), "청년들은 장군님의 사상과 이론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역설(「로동신문」, 8.28)하였다. 청소년 세대를 단속하기 위한 각종 집회도 계속 개최되었다.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전원회의 이외에 제12차 전국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3.13), 전국 학교청년·소년단 지도일꾼 열성자회의(8.23), 청년절 9돌을 맞이하여 청년동맹 일꾼들이 참석한 청년사업부문 토론회(8.22), 청년절 기념보고회(8.27) 등이 개최되었다.

사상적 결속과 아울러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은 청년들을 생산부문과 군사부문에 적극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청년들에게 "강성대국 건설에서 돌격대, 선봉대가 될 것"을 촉구하고,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영예롭고 성실한 의무로 간주하고 조국보위에 청춘을 바쳐야 한다"라고 주장(「로동신문」, 8.28)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과 강계-낭림구간 전기철도 건설에 청년돌격대가 투입되었고, 이들의 열성적인 노동을 촉구하는 쉼기모임이 개최(7.3)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평양-남포 고속도로를 '청년영웅도로'로 명명하는 등 청년 명칭을 붙인 건물들이 늘어났다.

한편 청소년 집단과 더불어 사회변화과정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식인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수, 박사, 부교수, 학사 등 총 831

명에게 국가학위직을 수여하는 행사도 개최(9.28)되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대군인들을 생산현장에 집단적으로 배치하는 사업도 시행되었다. 3월에는 1999년 10월에 완공된 함경남도 금야군 소재 광명성제염소에 300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고 제대군인이 집단 배치되었으며,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양강도 삼지연군 소재 포태종합 농장에 제대군인 1,000여명이 배치되었다. 농장 등에 배치되는 제대군인들을 위해서 평양의 고위인사들이 참여하는 환송식을 열고, 포상도 실시하였다. 제대 군인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하고 이들에게 살림집을 제공하는 등 각종 혜택을 베푸는 것은 생산활동을 독려하는 동시에, 농사 등 힘든 일을 회피하고 도시 거주를 선호하는 최근 북한 젊은이들의 경향을 억제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신년 공동사설에서 '우리식 생활양식'이 강조되면서 북한에서는 '생산문화,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을 위한 연관부문 일군회의'가 평양에서 개최(11.8)되어, "도시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면모에 맞게 꾸려 나가는 것"을 다짐하였다. 이는 최소단위인 개개인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일상 수준의 변혁을 통하여 전체적인 사회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공식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도 1999년을 고비로 북한의 식량난이 완화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정상을 되찾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수년간에 걸친 식량 부족으로 초래된 만성적인 영양부족은 각종 질병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엔 인도지원국(OCHA)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결핵 환자는 10만 명당 50명(1998년), 70명(1999년), 120명(2000)이며, 새롭게 발생하는 결핵환자도 같은 기간에 10만 명당 30명, 40명, 60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말라리아 환자의 경우도 1998년에 2천 100명에서, 1999년 9만 7천 2,000명에서

2000년에는 9만 5천 96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제 적십자사는 6월에 발표한 세계 재해지역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만성적인 기초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병원 의약품의 70%를 전통적인 약초에 의존할 정도로 일반 주민들의 삶이 열악하다고 평가하였다.

북한 당국은 4월 인민보안성 명의의 포고령을 통해 농민시장 출입자를 55세 이상의 부녀자로 제한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도시 인근의 장마당을 부분적으로 폐쇄하고 암달러상들을 단속하는 등 사회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중국 등으로 이탈하였던 주민들이 귀환하고,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류가 확대됨으로써 외부 정보의 유입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것이다. 2001년에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개방에 나서는 만큼 외부 정보의 유입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은 문화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새로운 정책으로 경제난이 완화될 경우, 이는 북한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사상적 통합을 근간으로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것이며, 사상교양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주민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사상교양 논리와 새로운 사고의 논리가 상호 충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남한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반제국주의적 선전의 설득력은 약화될 것이다.

북한은 사회적 갈등의 표출을 예방하기 위해 김정일의 사고방식 '전변'의 논리와 김일성 노선의 재해석 등을 통해 주민들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정책변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라. 군사동향

북한은 2000년도 공동사설에서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은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이라고 하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대중시'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군 관련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2000년 12월 27일 현재 김정일의 총 73회의 공개활동 중 군 관련 활동이 21회를 차지하였다. 1999년도(총 69회 중 군 관련 활동 41회)와 비교할 때, 전체 활동횟수는 다소 증가한 데 비해 군 관련 활동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그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일 자신이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군사지도자임을 과시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0년에는 군대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군부대 및 군인들에 대한 대규모 상훈 수여가 있었다. 「4.25 문화회관」에서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등 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투력 강화에서 모범을 보인 7개 부대와 군인들(약 1,350여명)에 대해 김일성 훈장, 국기훈장 등이 수여(2.11)되었다. 상훈 수여를 통해서 "김정일이라면 한목숨 기꺼이 바치는 자폭용사로 억세계 준비하며 조국보위 성전에서 총 권 병사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는 등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를 유도하였다.

이어 개최(2.26~27)된 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는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전재선, 박기서, 김룡연, 군종·병종사령관, 정치일군 등이 참석하였다. 북한은 군내의 당통제를 위해서 중대급까지 군총정치국 소속의 정치지도원을 파견하고 있다. 중대당 1명인 중대정치지도원은 중대원들의 정치사상 교육을 담당하며, 중대의 군사업무를 당적으로 조정·통제하는 군내의 하부정치조직이다.

이외에도 김정일은 충성확보를 위해서 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4.14)하는가 하면 당창건 55돌을 맞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33호("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 군사칭호를 올려 줄 데 대하여")를 통해 군 장령급 44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10.4)하였다.

한편 북한은 서해 NLL 불인정 담화를 발표(3.2)한데 이어 「서해 5

개섬 통항질서」를 공포(3.23)하여 1999년과 같은 서해군사위기 사태를 다시 조성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측 경비정이 조업 중 북측에 표류(6.15)한 우리측 어선을 즉각 송환했으며, 서해 꽃게잡이 조업철에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남측해역으로 넘어오는 것을 자제하였다.

북한은 대외 군사관계 측면에서도 미약하나마 활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군사친선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5.4~16)하여 양국의 군사적 차원의 친선을 도모하였다. 조선반제투사 노병위원회 부위원장인 지기선 상장을 단장으로 한 군사친선대표단이 러시아 노병위원회 초청으로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대독일 전승 기념('45.5.9) 55주년 행사 참석 차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북한과 러시아간의 군사교류는 한·소 수교('90.9) 및 군사협력 강화로 공식적으로는 거의 중단되었다. 그러나 2월 이바노프 외무장관이 북·러 친선·선린 협조조약 체결을 위해 방북했을 때 쌍방의 군부 인사간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군사교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군사교류 역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중국 방문(5.29~31) 시 군인사를 대동하였고, 김일철 인민무력부장도 츠하오티엔(遲浩田) 국방부장과 회담(6.17)을 개최하였다. 이어서 인민군 중장 한원화를 단장으로 하는 군 친선참관단이 중국을 방문(7.11~18)하여 츠하오티엔 국방부장 등을 면담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71년 체결한 군사교류협정에 따라 매년 각 2~3회씩 고위급 군사대표단이 상호방문, 쌍방의 군사적 유대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고 있으며, 1999년에도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 여춘석(7월)과 두티에환(杜鐵環) 중국군 북경군구 정치위원이 상호 방문(10월)하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협상을 매개로 대미 군사접촉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6월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가 유효함을 재확인(6.20)하면



서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북한은 1999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완화 결정(9.17)에 따라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위성발사를 임시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유예조치가 유효함을 재확인한 것은 미사일 회담을 비롯한 대미 군사접촉을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5차(7.10~12) 및 제6차(11.1~3) 북·미 미사일 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특사자격으로 미국을 방문(10.9~12)하여 클린턴 대통령을 면담하였다.

북한은 군사적 역량을 모든 대내외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다. 먼저 북한은 자원절약형 중심의 저조한 군사훈련 상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전투기량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북한은 부대 재편성과 재배치, 군사시설의 지하화 보강, 비행장, 방공기지 대공포 배치조정, 비상활주로를 추가 건설하는 등 내부적으로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부동원체제 유지 효과와 대남 군사시위 효과를 거두기 위한 포석의 하나로 판단된다.

북한은 2001년에 군사역량뿐만 아니라 정신전력의 강화를 독려하면서 군대 중시사상을 기반으로 군의 충성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조성된 미국이나 남한과의 전반적인 대화분위기를 쉽게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조성을 자제하는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부시 행정부와 새로운 갈등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화분위기를 당분간 유지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남한과의 군비통제에는 소극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군정치', '군사제일주의' 등의 기치 아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할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군사력 감축은 거부하면서 남한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유엔사 해체 및 미군철수문제에 집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개적인 요구는 자제하면서 대미접근 및 남북대화 기회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 2. 주요 대외관계

### 가. 북·미관계

페리보고서 공개('99.9.15) 이후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찰스 카트만 미 국무부 한반도평화회담특사는 베를린에서 회담을 개최(1.22~28)하여 미국의 경제제재 추가 완화,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중지 보장방안, 고위급회담 실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일부 현안에 대해 진전을 이루었지만 고위급 회담 실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뉴욕에서 개최된 김계관-카트만 회담(3.7~15)에서도 북한 고위급 인사의 워싱턴 방문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와 관련된 회담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과 미국은 로마에서 김계관-카트만 회담을 재개(5.24~30)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제네바 합의의 이행, 대북제재 완화 문제, 미사일회담 준비 문제 등을 논의하고, 향후 현안에 대한 사안별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양국은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유해 송환협상(6.7~9) 및 제5차 미사일회담을 개최(7.10~12)하였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문제는 자주권에 관한 것으로서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미사일 수출은 연간 10억달러씩 보상하면 중단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 직후 미 국무부는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99.9.17)하였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6.19)하여 공식 발표시켰다.

북한은 7월 27일 아세안지역포럼(ARF)의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ARF 회담 직후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회담(7.28)하여 양국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북한 고위급 인사의 미국 방문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회담에서 미국 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한 북한의 조건부 미사일 개발 포기설의 진위를 탐색하였으나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하였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테러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한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측은 평양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마이클 쉬언 미 국무부 테러조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개최(8.9~10)하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테러 반대 공개선언, 유엔 테러방지협약 등 국제조약 가입, 과거 테러행위에 대한 설명, 일본 적군과 요원 추방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일본 여객기를 납치했던 적군과 대원들은 정치적 망명자로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함으로써, 회담은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북한이 미국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9.6~8) 참석 차 뉴욕으로 향하던 중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미국 항공사 측의 보안검색에 항의, 미국 방문을 취소하고 평양으로 귀환하는 사태가 발생(9.4)하였다. 미 국무부

는 이 사건이 민간항공사 측과 북한 대표단 사이에 항공검색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미국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백남순 북한 외무상 앞으로 이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서한을 전달(9.7)하여 미국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양측의 입장 차이만을 재확인해 오던 미사일 협상과 테러지원국 해제 협상은 뉴욕에서 개최(9.27~10.2)된 김계관-카트만 회담에서 북한측이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을 제의함으로써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명록 부위원장을 특사로 미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명록 특사는 클린턴 대통령과의 회담(10.10)에서 관계정상화를 요구하며, 북한 로켓의 제3국 발사를 위해 국제사회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정식 제안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코언 국방장관 등과 회담을 개최한 후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10.12)하였다. 그 내용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이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개발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북한 미사일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둘째, 상호 적대관계를 포기하고 경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을 약속 받았다. 셋째,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4자회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활용한다고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조만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방문(10.23~25)하여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은 2차례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미사일 개발, 외교 대표부 개설, 한반도 긴장완화 등 양국간 현안들

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이 회담에서 양국 관계개선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해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제3국에서 북한 인공위성을 대리 발사해주고,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은 경제제재 완화 및 경험자원 지원 등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면 포기하는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말레이시아 팔라렘푸르에서 제6차 미사일회담을 개최(11.1~3)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장거리 미사일 대리발사 및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 중단에 대한 보상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여 일부 진전을 이루었다. 미국 측은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협상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미·북간 견해차가 남아 있는 한편, 11월 7일 실시된 미 대통령 선거가 당선자를 확정하기 못하고 혼란을 겪게 되자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었다. 공화당 후보 부시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클린턴 대통령은 방북 계획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방북 성과가 미지수인 반면, 퇴임 직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미국 내 여론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자 클린턴은 결국 방북 계획을 취소하였다.

공화당 의원들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유화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선거 기간 중 공화당 부시 후보의 외교·안보팀은 북한을 국제체제 밖에 존재하는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힘에 의한 압박정책을 통해 순응시키겠다는 강경입장을 표명하였다. 공화당 인사들의 보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2001년 1월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 공화당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전통이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여도 미국의 대북정책의 큰 틀은 급격히 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협상 자세는 보다 강경한 방

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미사일회담은 북·미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보상요구가 충족될 경우, 북한은 미사일 수출 및 개발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 실리 추구를 위해 체제수호의 안전판인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궁극적으로 포기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차관도입을 위해 미국에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요구할 것이며, 북·미 군사회담 개최와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 등을 요구할 것이다.

## 나. 북·중관계

2000년 북한은 대외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었는 바, 중국의 한국전 참전 50주년을 계기로 한·중수교 이후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 역시 전인대 「공작 보고」를 통하여 북한과의 전통우호관계 강화 의지를 밝히고, 북한 지도부와 교류를 확대하였다.

1999년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방중 시 합의에 따라 북·중 지도부 교환방문이 확대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조명록과 김일철 등 군 지도부를 대동하고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을 전격 방문(3.5)하여 중국과 우호관계 강화 의사를 천명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어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3.18-22), 중국 측과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 문제와 경제원조문제 및 남북대화문제를 협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2주일 앞두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5.29~31)이 극비리에 이루어졌다. 베이징 체류기간 중 김정일 위원장은 장쩌민 주석과 두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주룽지 총리, 리펑 전인대 상무위원장, 후진타오(胡錦濤) 부주석 등과 회담을 가졌다.

김정일의 방중으로 한·중수교 이후 최초로 북·중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 바, 이를 계기로 북·중관계가 정상적 관계로 완전히 복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은 대외적으로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한 북·중 공조를 과시하는 한편, 미국의 TMD 구상과 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추가 무상지원을 약속 받았으며,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대신 중국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약속 받았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은 자칭린(賈慶林) 베이징시 당서기 안내로 중국의 실리콘 벨리인 중관촌(中關村)내 련상그룹(聯想集團) 컴퓨터공장을 시찰하였으며,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로써 경제개혁·개방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중국간에 더 이상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며,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중국을 방문, 츠하오텐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6.17)하였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사태를 협의하고 북·중간 군사관계의 발전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군사협력 확대에 합의하였다.

장쩌민 주석은 북한 노동당 창당 55주년을 기념하여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10.9)하였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 북·중관계 개선, 북한의 대서방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한과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중국의 한국전 참전 50주년을 기념행사 참석차 츠하오텐 중국 국방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10.22~26)하였다. 츠하오텐 방북 시 북한이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을 상대적으로 더 예우하였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츠하오텐 국방부장은 김일철 인민무력상과 회담에서 양국 군대간 친선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

장과도 회담을 개최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츠하오텐도 북·중간 우호관계가 대를 이어 지속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장쩌민의 평양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의 중국 방문(12.12-19)이 이루어졌다. 그는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등 당·정 지도부와 접촉을 갖고, 상하이 푸둥지역의 개혁·개방 성과를 시찰하였다.

중국이 남북한에 대해 균형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냉전 시기와 같은 동맹관계로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북한과 중국 모두가 상대방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바, 북·중간 안보협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NMD와 TMD체제 구축을 강행할 방침으로 있다는 점도 북·중간 군사협력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1년 1월 김정일 위원장 방중시 북한의 요청에 따라 장쩌민 주석의 북한방문이 성사될 것으로 보여 북·중 지도부간 교류도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이 북한체제 혼란을 원하지 않고 북한과 전략적 협력관계 유지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물자 지원정책도 지속될 것이다.

#### 다. 북·일관계

2000년 북·일은 수교회담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관계진전을 이룩하였다. 수교회담 진행과정에서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과거청산 문제와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 등으로 수교회담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고노에 일본 적십자사 부사장과 하해룡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부회장은 베이징에서 2차 적십자회담을 개최(3.13)하였다. 북한측은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를 해당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고 밝혔



으며, 일본인 처 고향방문도 4월경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동시에 일본 측은 북한측에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쌀 10만 톤을 지원할 것이라고 공식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과 일본간 9차 수교교섭 본 회담이 평양에서 개최(4.4~8)되었다. 이는 1992년 11월 제8차 수교회담이 이은혜 문제로 결렬된 후 7년 5개월만이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측에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반면, 일본은 배상은 곤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중단, 일본인 납치의혹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북한측 대표 정태화 외무성 순회대사는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사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담을 더 이상 계속할 근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회담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시사했다.

이에 일본 대표인 다카노 고지로(高野幸二郎) 대북담당 대사는 일본과 북한은 식민통치기간 중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일본이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북한에 배상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이 회담은 특기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

제10차 수교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보다 3개월 뒤 일본의 지바현 기사라즈에서 개최(8.21~25)되었다. 북측에서는 정태화 대사가, 일본은 다카노 고지로(高野幸二郎) 대사가 수석대표로 회담에 참가하였다. 양국은 회담에서 외무성 직원의 상호 교류에 합의하는 한편, 민간경제인 교류가 바람직하는 데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양국은 협상의 최대 쟁점인 교섭방식이나 과거청산 방법 및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북한은 먼저 과거사를 청산하고 기타 현안은 추후에 해결하자고 하였으나, 일본은 과거사 청산,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 및 미사일 개발문제

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사죄와 보상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담화로 사죄문제는 해결되었다면서 재산청구권 문제 해결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납치 의혹에 대해 "일반 행방불명자 차원에서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과 일본은 10월말 중국 베이징에서 제11차 수교 본 회담을 열고 조기수교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이 발표되지 않았고, 다음 협상 일정마저도 잡지 못했다. 이는 과거 청산문제와 일본인 납치외국인 문제에 대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교회담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과거 청산문제였다. 북한은 보상을 요구한 반면, 일본은 경제협력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는 무상원조와 차관을 합하여 90억 달러(약 1조엔) 규모의 자금을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며, 모리 정권은 쌀 50만 톤을 조건 없이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10.19)하였다.

9차 협상에서 양측은 과거청산과 일본인 납치외국인에 대한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하려는 데 비중을 두었고, 10차 협상에서는 상호간 쟁점을 줄이는 데 노력했으며, 11차 협상에서는 실무적으로 상호 접점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분석된다.

북·일관계는 북·미관계 진전, 남북한 관계개선 등과 연계되어 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관계 진전속도가 다소 완화될 수 있고, 일본 모리 내각의 대내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전적으로 관계개선을 추진하기 어려운 바, 북·일수교가 쉽게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북한 미사일문제와 일본인 납치외국인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일본의 입장과 경제보상금 획득에 중점을 둔 북한의 입장이 계속 쟁점이 될 것이다. 북·일수교 협상의 일괄타결이 지연될 경우, 북한은 일본

인 납치의혹 문제의 부분적 해결을 수용하는 대신, 일본의 차관제공과 대북투자의 우선 실시를 요구할 수도 있다.

## 라. 북·러관계

북·러관계는 1961년 동맹조약을 대체하고 양국간 기본관계를 규정하는 신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소 수교이후 약 10년만에 냉각기를 청산하고 보편적인 국가간 관계로 재정립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직전 김정일의 방중, 남북정상회담 직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과 방북 등을 통해 북·러·중 3각 안보협력이 확대되었다. 북·러 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제교류·협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러시아간 3각경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가조인('99.3.17) 상태에 있던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의 공식조인을 위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990년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방북 이후 10년만에 평양을 방문(2.9~10)하였다. 그는 한반도의 긴장 지속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쌍무관계 강화와 정치적 대화 수준 제고에 대한 신조약의 기여 가능성, 협상을 통한 한반도문제의 해결과 한민족의 평화통일 노력 지지, 한반도의 군사·정치적 상황 개선과 동북아 평화·안전의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주변국들과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김정일에 대한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의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당시 김정일이 공식 석상에서 외국대표단을 접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담 계획은 없었다.

이바노프와 백남순 북한 외상간에 공식 조인(2.9)된 신조약은 전문과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10년간의 전반적인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문서이다. 신조약은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동등권 및 국제법 원칙을 기초로 우호관계 발전(제1조), 쌍방중 일방에 침략당할 위기

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의 즉각 접촉(제2조), 상호 이해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기적 협의(제3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에 따른 한반도 통일 지지(제4조), 통상, 경제,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발전을 위한 적극 노력(제5조), 양국 의회와 다른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간 관계 심화(제6조), 양국 도시, 기업, 단체 및 양측 인사간 접촉 등 다양한 수준에서 다방면의 접촉 활성화(제7조), 10년간 유효하며 일방이 12개월 내에 조약의 연장불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5년 단위로 자동연장(제12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조약에서는 1961년 동맹조약의 주요 내용이었던 이념적 연대 조항과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배제되었다. 그러나 러·북 양국은 '안보위협 발생 시 즉각 접촉'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제한적 군사협력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는 양국이 「한·러 기본관계조약」 제2조 규정보다는 더욱 긴밀한 군사협력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해 온 고려연방제 지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 측 대표단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백남순 외무상 등 북한 고위관리와 양국 인사들의 교환방문을 비롯한 정치·경제적 협력 증진, 미·일의 TMD 체제에 대한 공동 대처, 한반도 정세, 북한 무기체제와 구 소련 시대 건설된 공장들의 노후화에 따른 협력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양국은 조약의 체결이 "두 국가 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으로 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이바노프는 출국직전 기자회견에서 "1990년대 러·북간에 직면했던 냉각기가 극복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일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다탄두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2.16)이었지만 이바노프의 방북을 계기로 이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측이 러시아의 신군사독트린에 입각하여 북한을 러시아의 핵우산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며, 대신 미사일 및 미사일기술 비확산 국제협상에서 북한을 러시아의 완전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어 회담 준비와 진행 과정을 예의 주시했으며, 이 회담을 획기적인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지하며 크게 만족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선진공업 8개국회의」(G8)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에 러시아 최고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7.19~20)하였다. 그의 방북 목적은 미·일의 TMD 계획과 남북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 견제, 러·북간 군사협력 문제 협의, 향후 자신의 방한을 약속한 상황에서 남북한에 대한 균형관계 유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경제실익 확보 등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경협 문제를 논의하고 전통적인 선린관계 유지, 안보위협 상황 발생 시 지체 없는 상호 접촉,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지지,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 등 11개항의 「조·러 공동선언」을 채택(7.19)하였다. 중·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중·북간 군사동맹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러 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러·중 간에 3각 안보협력이 긴밀히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이 "다른 나라들이 평화적인 우주탐사를 위한 로켓 발사체를 제공할 경우 단지 타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할 것을 김정일이 푸틴에게 말했다"고 보도(7.19)함으로써 한·미·일 등 관계국은 이 보도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문제는 미국이 요구해 온 북한의 미사일 개발중단을 검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등의 세부적 사항에 진전이 있는 경우에 해결될 전망이다.

김정일은 푸틴 대통령 방북 시 초청으로 9월 초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고 양국간의 구체적인 경협사업을 논의한 이후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2001년으로 연기되었다. 이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남 및 대미 문제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태지역 방위관계자 회의 참석 차 일본을 방문중이었던 이바쇼프 러시아 국방부 대외협력국장은 "러시아가 한반도 군사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10.18). 그는 "우리는 남북한 두 나라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북한과도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함으로써 러시아 정부가 균형된 남북한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시켰다.

경제면에서 러시아는 국내경제 호전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남북한간의 화해·협력 분위기 속에서 경제적 실익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한·러시아간의 3각경협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한과의 정상적인 경제관계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조약 체결을 위한 이바노프의 방북 시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북한 공장들의 재건과 현대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포함한 경험증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발표되자 러시아 정부는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에 대한 공동참여 의사를 한국 정부에 밝혔다. 푸틴 대통령도 방북시 구 소련의 기술로 건설된 산업시설들의 복구, 남북한과 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대륙횡단 철도 사업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구체적인 경제문제들을 김정일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남북한 철도 연결과 철도망 정비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모리 일본 총리에게 전달해 주도록 일본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에게 부탁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임업상 및 채취공업상과도 회담을 갖고 극동지역의 수산업, 광물채취 부문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회담을 가졌다.

필리포프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

(10.17~20)하여 강정모 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측 대표단과 제3차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양측에서 무역, 금융, 과학기술, 노동, 운수 등 다양한 경제부문 실무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대러 부채문제, 북한 노동력의 러시아 진출 문제, 석탄산업과 운송부문 협력 문제, 남북한 철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을 포함한 남북한·러시아간 3각경협 문제 등이 협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의의 가장 주요한 의제는 북한의 대러 부채 상환 재조정 문제이었다. 러시아 측은 그 동안 북한이 채무의 1/3을 상환할 것과 나머지 부분의 상환방법 모색을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양측은 정확한 부채규모, 부채상환 단계와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정부는 남북한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에 큰 관심을 보여왔는 바, 첼코 러시아 철도부 제1차관이 평양을 방문(10.30)하여 양국 철도 연결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북·러 양국은 제14차 어업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12.20)하고 러시아가 조업한 생선을 북한 신포에서 가공하기로 하는 등 수산업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2001년 북한과 러시아는 21세기의 양국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규정하고 지정학적 차원에서 향후 협력을 내다보고 있는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과 「조·러 공동선언」을 기초로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은 양국관계가 재정립 상태에서 벗어나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부시 신행정부가 들어서 NMD와 미·일의 TMD 계획이 가시화되면 북·러·중 3각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의 정례화를 통해 북한의 대러 부채 문제 등 양국 경제관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가 회복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난, 에너지난, 외화부족 등을 고려할 때, 2001년에도 북·러 경제관계의 정

체가 예상된다. 3각경협에 이해를 갖고 있는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북한철도를 휴전선까지 잇는데 필요한 지뢰제거를 포함한 기술과 건설의 재정지원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 3. 대남 동향

2000년 북한의 대남전략은 크게 변화하였다. 북한은 1999년까지 남북당국간 접촉은 최소화하면서 민간교류를 통해 실리를 추구해 온 기존의 전략에서 탈피하여, 남북정상회담과 부문별 후속 대화에 참여해왔다.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선언(3.9)을 통해 남북당국간 경협, 이산가족 문제 해결, 한반도냉전 종식과 평화정착, 이를 위한 남북대화의 재개 등 4대 과제를 제안하자 북한은 "새로운 것이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남한이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실제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아무 때나" 당국간 대화에 응할 수 있다며 당국간 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남북한은 비공개 접촉을 통하여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4.8)하였다.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의전, 회의형식, 호칭 등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남한 정부를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정상회담에 적극 참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헌법개정, 권력승계 마무리 등으로 대내정치가 안정됨에 따라 대남접촉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

둘째, 정상회담이 통일을 위한 김정일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일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당면 경제난 타개를 위한 대규모 경제재원 확보를 위해서 당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넷째, 남한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북한이 포용



정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다섯째, 대외적으로 그 동안 남북대화를 권유해 온 서방국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모습을 과시함으로써 '불량국가' 이미지를 쇠퇴시키고 경제협력을 위한 대외 관계개선의 가속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정상회담 직후 대남비방을 중단하였으며, 장관급 회담, 국방장관 회담, 특사회담, 적십자 회담, 남북경협 실무접촉 등 각종 회담을 수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측 대표들은 과거와 달리 대화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이어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공동선언의 첫 결실로서 남북적십자회담이 금강산에서 개최(6.27~30)되었다. 이 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00명 규모의 제1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8.15~18)하였다. 제2차 남북적십자 회담(9.20~23)을 통해 두 번째 이산가족 교환방문도 성사(11.30~12.2)되었다. 과거 이산가족문제를 정치문제로 인식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꺼리던 북한이 이산가족 교환 방문에 합의한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등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서울, 평양, 제주 등을 오가며 개최된 네 차례의 장관급회담(7.29~31, 8.29~9.1, 9.27~30, 12.12~16)에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조총련 동포의 고향 방문, 경의선 철도 복원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 군사당국자회담 추진, 경제협력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공동추진,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 실시, 이산가족 문제 해결조치에 당국간 협력, 남북경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 서울·평양 정기 친선축구대회 개최, 어업 부문 상호 협력 등에 합의하

였다.

북한은 남북경협사업에는 적극적인 반면, 군사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측이 군사 직통전화 설치와 군 당국자 회담 개최를 제안하자 북측이 "민감한 군사문제는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고리"라고 언급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남측이 군사문제 논의를 강력하게 요구하자 북한은 결국 김용순 특사의 서울 방문(9.11~14) 시 이를 수용하였다. 특사 회담에서 김용순은 가까운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국방장관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남측의 조성태 국방장관과 북측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장관회담이 개최(9.25~26, 제주)되었다.

한편 북한은 10월에 들어서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제3차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 대표가 남측에게 밝혔듯이 남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일손이 부족'한 것이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은 조명록 차수의 미국 방문(10.9~12)과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10.23~25) 등 북·미회담 준비, 당 창건 55돌(10.10) 기념식 준비 등으로 남북대화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또한 북한은 남북대화가 너무 빨리 진전될 경우 예상되는 북한 사회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 대화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민족대단결', '통일' 및 '자주'를 앞세운 대남 통일전선전술을 지속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은 정상회담 직후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할 수 없는 민족내부 문제, 민족자결권에 속하는 문제"라면서 "남조선에 외세에 송두리째 떠맡기고 외세와 야합하여 나라와 민족의 영구 분열을 획책하는 극악한 민족반역의 무리들은 전민족이 공동투쟁으로

권력의 자리에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로동신문」 논평 등을 통해서도 외세배격과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였다. 또한 「평양방송」은 12월초 "공동선언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살리고 장차 연방제 통일로 나가는 길을 명시했다"고 주장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비방이 줄어들긴 했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북측은 2차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장충식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월간지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아 그를 격렬히 비난, 남북관계의 장애요인을 조성하였다. 또한 북한은 야당총재와 전직 대통령 등의 대북 발언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언론보도를 문제삼아 이산가족 상봉 취재 차 방북한 「조선일보」 사진기자를 억류·조사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한국의 「국방백서」가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한 것을 강렬하게 비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남한 길들이기' 의도와 함께 대남협상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에도 북한은 대남관계 개선의 기초를 유지할 것이며, 특히 에너지 및 식량부문에서의 경제지원과 대규모 경협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에 호응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적십자회담과 각 분야별 실무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협력사업의 구체적 이행과정에서 속도를 전술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리를 확보하고, 남북협력 증진으로 인한 체제 이완을 차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금강산사업의 확대, 개성공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미지 개선 효과 및 경제적 실리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체육교류 및 문화·예술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 Ⅲ. 남북한 관계

#### 1. 정상회담과 남북대화

##### 가.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6.13~15)은 남북간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은 향후 북한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낳았다. 또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간에 화해와 협력을 통한 참된 동반자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체제인정에 기초한 '화해적' 공존관계를 수립하였다는 데에 획기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긴장과 갈등 대신 평화와 화해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소모적 경쟁 대신 남북한간 합의를 바탕으로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1) 「6·15공동선언」의 내용 및 의의

「6·15공동선언」의 5개 합의사항 내용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①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공동선언 제1항의 통일문제에 대한 '자주적' 해결 원칙은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천명한 것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통일문제 해결과정에서 '국제적' 접근방식과 함께 '민족적' 차원의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7·4공동성명」에서 자주원칙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었으나, 「6·15공동선언」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민족의 단합과 공조'에 초점이 두어졌다.

② 남북한 통일방안의 상호 이해: 공동선언 제2항에서는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이 인정되었다. 북한은 '91년 신년사에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의 느슨한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제도적 통일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런 점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측의 국가연합 단계의 공통점을 상호 인정한 것은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성과를 낳은 것이다. 제2항은 통일과정에서 남북 양측이 급격한 국가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체제인정과 공존공영의 단계를 거쳐 완전한 통일을 지향한다는 통일접근 방식에 합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하여 비전향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차원의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남북 최고당국자의 인식이 일치하였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이 형식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절박성을 지닌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해 민족의 고통을 덜어 준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④ 경험 및 교류·협력의 활성화: 경험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제반분야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합의는 본격적인 남북한 화해·협력을 구축해 나가자는 취지에 서로 공감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이 '제도적·법적'(de jure) 통일보다는 '사실상의'(de facto) 통일을 추구해 나가자는 데 합의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⑤ 당국간 대화재개 합의: 남북 당국자회담의 상설화에 대한 합의 항목은 당국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남북간 대화의 정례화 또는 대화의 제도화를 통해 향후 국가연합의 틀을 준비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 동안 당국간 대화를 기피해 온 북한의 태도를 감안할 때, 당국자간 회담의 상설화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의 마련에 합의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남북공동선언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로, 5개 합의사항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뚜렷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남북공동선언은 후속조치의 추진과 합의사항 이행 등의 실천적 과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북한의 성의를 보일 수 있는 실질적 징표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01년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다. 이 문제는 6·15 공동선언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 동안 김 위원장을 비롯하여 북한의 고위인사들이 '답방 실현'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이 없는 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적절한 시점에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통일방안과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의 정례화에 대한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로서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남한 사회의 국민적 지지는 대북정책의 성과를 가름하는 관건적 요소이다. 남북관계의 환경적 요인인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및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2001년에도 남한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협을 통한 북한경제의 회생과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 나. 부문별 남북대화

### (1) 장관급회담

6·15공동선언 이행에 따른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명의의 대북서한을 통해 남북장관급회담을 서울서 개최할 것(7.27~29)을 제의(7.19)했고 북측이 이 제의를 수용하되 회담개최 일자를 수정 제의(7.21)함에 따라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

다(7.29~31).

이후 통일부장관과 북한의 전금진 내각 책임참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공동선언의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실무회담을 출범시킴으로써 남북대화의 틀을 구축하는 동시에 화해·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중심협의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장관급회담은 2000년 4차례 개최되어 31개항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특히 제4차 회담에서는 6·15공동선언 이후 진행된 남북관계를 총결산하고 2001년도에 추진할 사업구상을 논의하였다. 그 동안 특사회담 및 장관급회담을 통해 합의·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차 남북장관 회담(7.29~31, 서울)

- ① 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한다.
- ② 1996년 11월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를 2000년 8·15를 계기로 재개한다.
- ③ 8·15 에 즈음하여 남과 북, 해외에서 각기 지역별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며, 그 실천을 위한 진민족적 결의를 모으는 행사를 진행한다.
- ④ 총련 동포들이 방문단을 구성하여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⑤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며, 이를 위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기로 한다.

□ 제2차 남북장관 회담(8.29~9.1, 평양)

- ①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사업을 2000년 내에 두 차례 더 진행하며 서신교환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들을 협의한다.
- ②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도록 협의한다.
- ③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차관을 통한 대북 식량 제공 문제를 검토하여

추진한다.

④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9월중에 가지고 착공식 문제 등을 협의한다.

⑤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⑥ 백두산, 한라산 관광단을 각기 100명 정도의 규모로 하여 9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사이에 상대측 지역에 보낸다.

□ 김용순 특사 방문(9.11~14)

① 가까운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며,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

② 국방장관회담 개최문제가 논의되는데 대해 환영한다.

③ 이산가족생사·주소 확인 작업을 9월중에 시작하며, 생사가 확인된 사람부터 서신교환을 추진하고 9월 20일 적십자회담을 개최한다.

④ 남북경협실무접촉을 9월 25일 서울에서 개최하고, 제도적 장치 문제를 타결한다.

⑤ 빠른 시일 내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기공식을 개최한다.

⑥ 북측의 경제시찰단을 10월중 남측에 파견한다.

⑦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남북 공동조사 실시 등을 추진한다.

□ 제3차 남북장관 회담(9.27~30, 제주)

① 기존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앞으로의 실천적 사업들을 계속 협의하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② 이산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금년 말부터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③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문제와 함께 분쟁해결절차와 청산결제제도 마련 문제도 빨리 타결하기 위해 협력한다.

④ 경제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협의·설치한다.

⑤ 서울·평양 정기 친선축구대회 개최 및 교수·대학생·문화계 인사 상호 교환문제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한다.

□ 제4차 남북장관 회담(12.12~16, 평양)

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위원회는 2000년 12월 26일경 1차 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며, 여기에서는 전력협력,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업단지 건설,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문제 등 당면한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해결하기로 한다.

② 어업부문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며 북측의 동해어장 일부를 남측에 일정기간 제공하는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하기로 한다.

③ 태권도 시범단 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태권도 단체간의 접촉을 권고하기로 한다.

④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생사·주소 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3월에 300명 정도로 한다.

⑤ 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2001년 2월말에 100명씩 실시한다.

⑥ 북측은 한라산 관광단을 2001년 3월, 경제시찰단을 2001년 상반기에 파견한다.

⑦ 남북 수석대표들이 서명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청산결재에 관한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각기 발효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를 상호 통보한다.

(2) 경제부문 남북대화

2000년 남북 사이의 본격적인 경제부문 회담은 9월과 11월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2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경협실무접촉과 12월말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이다. 남북간의 경제부

문 대화는 6월의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바 있는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다.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7.29~31)에서는 경의선 철도를 복원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장관급회담(8.29~9.1)에서는 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쌍방 전문가들의 실무접촉을 9월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남측은 북측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북측에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추진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개최된 제1차 남북경협실무접촉(9.25~26)에서는 이들에 걸친 회의결과를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3가지이다. ①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 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타결키로 하였다. ② 쌍방은 투자보장 합의서와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에 대한 토의를 진지하게 진행하였으며, 합의서 초안에서 나타난 차이점들을 제2차 접촉에서 합의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데 이해를 같이 하고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데 따라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1차 남북경협실무접촉은 지난 1985년에 중단된 남북경제회담을 15년만에 재개함으로써, 경협분야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기본틀을 구축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어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3차 장관급회담(9.27~30)은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문제와 함께 분쟁해결 및 청산결제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조속한 타결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시키는 데 필

요한 제반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하였다.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경협실무접촉(11.8~11)에서는 양측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및 청산결제 등 4개 분야에 대해 일괄타결하고 이들 4개 합의서에 가서명하였다. 4개 합의서의 타결은 남북당국자가 협의를 통해서 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를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 이를 통하여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 그리고 북측의 경협 확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장관급회담(12.12~15)은 3차 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후 남북경협추진위)의 구성과 추진일정 및 협의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으며, 남북 어업부문의 협력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고, 경협 관련 4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평양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경협추진위 회의(12.28~30)는 전력협력,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임진강 수방대책, 개성공단, 남북경협추진위의 구성·운영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양측은 1월중 북한의 전력실태에 대해 공동 조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임진강 수방대책과 관련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 위한 회의를 1월에 열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은 날씨가 풀리는 3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2차 회의는 2월 초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되었다.

## 2. 군사안보 분야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군에게 대남 비방방송을 중지하도록 명령하였다. 비방방송 중지는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결산하는 6·15 공동선언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가 빠진 데 대

한 실망도 표출되었다.

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다시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 확실해졌다"<sup>1)</sup>고 했지만 정상회담에서 안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북한에 대해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며, 그 결과 남북 분단 이후 최초의 국방장관회담이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9.24~26). 김일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13명의 북한 대표단은 판문점을 넘어 입국해서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군용기 편으로 제주도로 이동했다.

남북한간에 구성되었던 최초의 군사협약체는 지난 92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 의거한 군사분과위원회였다. 군사분과위원회는 92년 8월까지 여덟 차례의 회담을 가진 바 있는 데, 북한 핵문제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된 바 있다.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이후 8년만에 개최되는 군사회담이면서 동시에 남북한 군의 최고위 당국자가 대면하는 첫 번째 회담이었다.

국방장관회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첫째, 양측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교류·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방장관회담이 6·15 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둘째는 양측 군의 최고위 인사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이룩해서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6·15 선언에서 '평화'와 '긴장완화' 문제가 소홀히 다루졌다는 일부의 지적과 우려를 의식한 합의인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는 경의선 철도와 도로 건설을 위해서 비무장지대 안에 장비와

---

1) 2000년 6월 16일 청와대 국무회의 발언.

인원이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도로와 철도 주변의 관할지역 설정문제를 정전협정에 기초해서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제1차 국방장관회담은 애초 북한이 주장했던 대로,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에 따르는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회담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합의하고자 했던 남한측에서 볼 때는 아쉬움이 남는 회의였다.

1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남한측은 남북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항들, 예를 들어, ① 4성 장군 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군사위원회 설치, ② 군 수뇌부간 직통전화 설치, ③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훈련의 상호 통보와 훈련 참관, ④ 군 인사를 상호 교류하는 문제 등을 북측에 제시했지만 북한측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양측은 11월 중순에 2차 회담을 북한 쪽에서 갖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측의 지연으로 회담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국방장관 회담에서 경의선 복원공사를 위한 군사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남한은 10월 9일 북한에 대해 10월 13일 첫 회의를 갖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1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의 서한과 18일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급 접촉에서 유엔군 측이 DMZ 내 공사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남한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 문제를 갖고 한 달 여를 줄다리기하던 북한과 유엔사는 11월 17일 DMZ 남쪽 공사구간의 관리권을 유엔사가 남한에 위임키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남북한이 직접 관리하는 최초의 구역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관심을 끄는 것은 행정적·기술적 차원뿐 아니라 군사적 문제까지 남북한이 처리하기로 한 점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권한인 '관리권'(Administration)은 물론 우발적인 무력충동 사태에 대한 감시 및 처리권한인 '관할권'(Jurisdiction)까지 남한에 위임한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외형은 관리권, 실체는 관할권' 형태를 띠게 된 것은 정전협정의 틀을 깰 수 없다는 유엔사의 입장과, 관할권까지 넘겨줘야 한다는 북한의 입

장이 타협점을 찾은 결과이다. 북한은 합의서에서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유엔사와 정전협정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 대신에, 사실상의 관할권 위임이라는 실리를 취하였다. 남북한은 제4차 군사실무회담(2001.1.31)에서 DMZ내 남북관리구역에서 양측 군과 공사 인력의 행동규칙을 정한 공동 규칙안(가칭,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한편, 남한의 국방부는 12월 4일 2000년도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2000년도 남한의 국방백서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다. 예를 들어,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주적'으로 못박고 있지만, 장병의 정신교육 부분에서는 '김정일'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호칭하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신축성을 나타냈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제기하는 군사적 위협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남 비방방송을 중지하는 등 일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작년에 비해 육군 전력은 63개 사단에서 67개 사단으로, 야포는 1만 2천 문에서 1만 2천 5백 문으로, 전투기는 850대에서 870대로 각각 늘어났고 주요 군사력의 55퍼센트 이상을 전진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평가는 미 국방부가 지난 9월 12일 의회에 제출한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이라는 보고서의<sup>2)</sup>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한의 「국방백서」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사실을 비난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12.10). 조평통 대변인은 남한 당국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란다면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대결시대의 낡은 유물을 청산하라고 요구하면서, 주적

---

2)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2000 Report to Congress: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ptember 12, 2000.

론을 내세우는 한 대화는 무의미하며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 국방부의 당국자는 "주적 개념을 삭제하면 국방정책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공동선언을 실질적인 힘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주적 개념을 존속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sup>3)</sup> 주적 개념을 둘러싼 시비는 12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도 계속되었다. 북한은 주적론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남한은 남북한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뤄지면 주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한의 2001년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2001년 1월 17일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2001년 안보정책의 3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화해·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차분히 추진하고, 경의선 연결 등 남북공동체 건설과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반 구축이다. 한·미·일 3국 공조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며,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 실천방안이다. 셋째,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주국방태세의 확립, 한미 연합방위의 지속적 발전 그리고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1년에 남북간 군사적 차원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북한이 남한보다는 미국을 상대로 실질적인 군사대화를 진행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의 희망대로, 다양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합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의선 개통을 둘러싼 제한된 분야의 군사협력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

3) 국방부 차영구 정책기획국장 발언, 「한겨레신문」, 2000.11.17.

그러나 북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한의 대북 평화공세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햇볕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보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고 미·중이 보장하는 평화협정을 4자회담의 틀 안에서 임기 내에 체결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sup>4)</sup> 2001년에는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비례하여 남한 내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3. 교류 · 협력분야

#### 가. 경제분야

##### 〈남북교역〉

2000년 남북교역은 전년도에 비해 규모 면에서 크게 증대했다. 200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남북교역은 총 4억 2,515만 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4억 달러를 초과했다. 2000년도 교역액은 반입 1억 5,237만 달러, 반출 2억 7,277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25.3%, 28.7% 증가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의약품 등의 화학공업제품, 수송기계 등 기계류와 시멘트·유류제품, 전자 및 전기 제품의 반출이 늘어났다. 이로써 2000년도에 남한은 중국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교역상대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000.11월 기준 중국 4억 3,882만 달러, 일본 3억 8,499만 달러).

---

4) 중앙일보 창간35돌 특별기자회견, 「중앙일보」, 2000.9.22.



남북 교역 현황 <표 1>

(단위: 천 달러)

년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1989	66	25	18,655	1	1	69	67	25	18,724
19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1991	300	44	105,719	23	17	5,547	323	61	111,266
1992	510	76	162,863	62	24	10,563	572	100	173,426
1993	601	67	178,167	97	38	8,425	698	101	186,592
1994	827	73	176,298	495	92	18,249	1,322	159	194,547
1995	1,124	105	222,855	2,720	174	64,436	3,844	265	287,291
1996	1,648	122	182,400	2,980	171	69,639	4,628	290	252,039
1997	1,806	140	193,069	2,185	274	115,270	3,991	385	308,339
1998	1,963	136	92,264	2,847	380	129,679	4,810	486	221,943
1999	3,089	172	121,604	3,421	398	211,832	6,510	525	333,437
2000. 1-11	3,530	194	140,558	3,136	486	259,207	6,666	621	399,765

주: '95년 교역금액에는 대북 쌀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교역량의 큰 증가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역은 상당부분 비거래성 교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10월까지 교역액 중 상업적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위탁가공교역 1억 1,126만 달러를 포함, 총 2억 350만 달러로 전체 교역의 55.6%를 차지했다. 반면, 무상지원 및 협력사업용 물자반출 등 비거래성 교역은 총 1억6,225만 달러를 기록, 전체교역의 44.4%를 차지했다. 비거래성 교역은 주로 경수로 사업 물자와 금강산 관광사업,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중유 지

원, 그 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2000년 10월 기준 9,472만 달러를 기록, 전체 비교역성 거래의 58.4%를 차지했다.

한편 위탁가공교역은 1993년 이후 급신장 하여 1998년에 전체교역의 32%, 1999년에는 다소 하락하여 29.9%를 기록했으나, 2000년 1~10월까지는 1999년 동기 대비 34.5%가 늘어났으나, 전체 비중은 30.4%를 유지했다.

### 위탁가공교역

(단위 : 천달러)

년도	입		출		합 계	
	금 액	위탁가공	금 액	위탁가공	금 액	위탁가공
1989	18,655	0	69	0	18,724	0
1990	12,278	0	1,188	0	13,466	0
1991	105,719	0	5,547	0	111,266	0
1992	162,863	638	10,563	300	173,426	838
1993	178,167	2,985	8,425	4,023	186,592	7,008
1994	176,298	14,321	18,249	11,343	194,547	25,663
1995	222,866	21,174	64,436	24,718	287,291	45,892
1996	182,400	36,238	69,639	38,164	252,039	74,402
1997	193,069	42,894	115,270	36,175	308,339	79,069
1998	92,264	41,371	129,679	29,617	221,943	70,988
1999	121,604	53,736	211,832	45,883	333,437	99,620
2000. 1-11	140,538 (110,126)	68,709 (50,488)	259,207 (201,865)	53,996 (42,060)	399,745 (311,992)	122,705 (92,568)

2000년 남북교역에서 주목되는 점은 농수산물과 의류 분야의 단순 임가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전자제품 등 고부가치 영역의 교역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반입기준 위탁가공교역 품목구조를 보면 1999년의 경우 섬유류가 전체의 88.3%, 전기·전자, 기타 제품이 각각 5.3%와

4.1%를 차지했으나, 2000년 1~8월 동안에는 섬유류의 비중이 전체의 67.2%로 하락한 반면, 농림수산물 가공품과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이 각각 12.3%와 10.7%로 상승했다.

이와 같이 전기·전자분야에서 위탁가공교역 비중이 증대된 것은 삼성전자가 지난 2000년 2월 컬러TV 2만대, 유선전화기 24만대, 라디오 카세트 12만대를 생산하기 위해 5억 530만원 상당의 위탁가공 생산설비를 북한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0년 7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산하 한성전기, 한국코아, 기라정보통신, 제일물산, 삼흥사 등 5개 중소기업체가 대북임가공사업에 진출하고, 하나로통신도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ADSL신호분배기 임가공 계약을 평양에서 체결한 데 힘입은 바 크다.

남북한은 지난 12월 제4차 장관급 회담을 통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를 비롯한 청산결제 및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정식 서명하고 각자 발효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청산결제와 관련, 남북 양측은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 거래 대상상품과 거래한도, 청산은행, 청산계정의 신용 한도 등을 정해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청산결제방식이 도입됨으로써 남북간에는 교역 건별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남북한간 교역누적 차액만을 결제하게 되고 채권국이 채무국에게 채무액 만큼을 자동 대월해주는 대월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남북간의 직교역 체제구축과 남북 상호간의 교역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물품의 공급과 판로 확보, 환전과 송금에 따른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상호 교역 의존도를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북한의 대금결제 능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으며, 교역 확대의 최대 장애 요인이었던 남북한간의 적절한 대응 구매 상품 부재 문제와 대금결제에 대한 교역업체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향후 남

북 교역은 그 규모 면에서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 〈경제협력〉

경제협력사업 면에서 현재 남북간에는 총 18개 사업이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2000년에 실현된 것은 단지 2개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평화자동차는 2000년 1월 666만 달러를 투자, 남포시 항구동에 평화자동차 합영회사를 설립했으며, 오는 2006년까지 연산 10만대 규모의 자동차 조립생산공장을 건립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000년 3월 72만 7천 달러를 들여 북한의 조선컴퓨터 센터와 공동으로 중국 베이징에 「남북합영 프로그램 센터」를 설립했다. 이 가운데 현대의 금강산 지역 개발 관련 공사가 1억 4,880만 달러로 투자예정 총액 1억 7,138만 달러의 86.8%를 차지하고 있다.

경수로 공사 관련 4개 사업과 현대의 금강산 지역개발 관련 2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협력사업 중 절반에 해당하는 6개 사업이 농수산업 부문 등 1차 산업 분야에 치우쳐 있으며, 나머지 사업도 광고,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 등으로 북한 산업과의 직접적 연계성은 낮은 편이다.

남북 당국자간 이미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은 2000년 7월 31일 제1차 서울 장관급 회담과 8월 29일부터 열린 제2차 평양 장관급 회담을 통해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한은 2000년 9월 18일 경의선 연결 착공식을 갖고 비무장 지대 지뢰제거에 착수했으며,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 준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의선이 연결되면 우선 남북경협 물자수송로인 인천-남포 해상로를 대체한 수송로가 열림에 따라 1,000달러 정도인 20ft 컨테이너 해상운임이 300~400달러로 낮아짐에 따라 물류비 절감효과가 남북교역 및 경험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또한 경의선 연결에 따라 북한의 산업시설과 남한의 산업시설이 연결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촉진될 것이다. 아울러 경의선 연결은 한반도의 지경학적 위상을 제고하고 환황해(광양·서울·신의주·심양·북경·상해 배후지역) 경제권 형성과 함께 한반도를 유럽·아시아 대륙의 교통·물류 중추(hub)로 부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차원에서 합의된 현대의 금강산 일대 경제특구 개발(6.30)과 개성공단개발(8.23) 및 서울에서 개성까지 육로를 이용한 관광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는 금강산 일대를 '특별경제지구'로 지정, 북한과 금강산 벨리를 조성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동해항에서 장전항까지의 연안 5마일 직항로(기존 12마일) 관광선 항로 개설 및 쾌속선을 운항하고, 온정각을 중심으로 장전항에서 금강산호텔까지의 자유통행로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인 등 외국인과 해외동포의 금강산 관광이 전면 허용됨으로써 사업 수익성 제고가 도모될 것이다.

관문군 평화리 개성시의 배후도시로 건설될 개성공단지역은 특별경제지구로 지정되어, 현지조사를 거쳐 2001년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규모는 총 2천만 평(공단부지 560만 평, 공단 기반시설 240만 평, 배후신도시 1200만 평) 정도이나 현대는 1단계로 1백만 평(2001), 2단계로 200만 평(2001~2004), 3단계로 500만 평(2005~2008) 등 점차 확대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1단계 시범공단에는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입주되고, 2단계에는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 통신, 컴퓨터 등이 유치될 것이다. 개성 공단 내에 조성되는 7만 5천 평 내지 10만 평의 전자부품 생산 전용공단에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이 이미 입주 합의를 체결하였다.

한편 대북 전력지원 문제는 대북 경제지원이라는 틀 속에서 합리적

인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북한의 전력실상을 조사한 후 남북경협외의 종합구도 아래 그 구체적 형태는 전력을 당장 송전하는 방법이나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법보다는 북한의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는 연료를 먼저 제공하는 방안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유전력의 대북 송전은 남북한의 송배전 선로 계통이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송배전 설비가 노후화하였기 때문에 양측의 검토 및 실사결과에 따라 송·배전망 재구축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은 어업부분에서의 상호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동해 북측 어장의 일부를 일정한 남한에 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이 공동어로구역으로 제한한 동해안 어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2000년 2월 남한의 전국어민총연합(전어총)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합의한 은덕어장 부근 수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민경련은 은덕어장의 우선적인 이용권이 북한의 민경련과 남한의 전어총에게 있으나, 필요에 따라 쌍방의 합의하에 다른 기업이나 단체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제4차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이 동해안 어장에서의 협력사업을 거론함에 따라 이 분야의 남북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 남북 경제협력 여건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이 경제협력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의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남북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남한 정부의 의지와 경협외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남북경협외의 활성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대북 진출도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2001년도에는 북한의 대내외정책이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며 북한 당국이 6·15 공동선언의 성실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남북경협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근 한반도 주변환경은 남북경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 완화(6.19)는 미국과 북한간 교역, 투자, 금융거래, 수송, 여행 등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발판을 마련, 한미기업들의 대북 동반진출 동기를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국제테러에 관한 미·북 공동성명'(10.6)도 미국의 대북한 테러지원국 지원명단에서의 해제를 예고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북한 제품의 미국 수출시장 확보는 물론, 북한을 통한 남북한 임가공 교역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원명단에서 해제될 경우 북한은 IMF, IBRD, ADB 등 각종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기술적 지원 및 금융 지원을 획득하고자 할 것이다.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차관제공과 연계하여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나. 사회문화분야

2000년도에는 소강상태에 있던 문화·예술체육분야의 남북한 왕래성행사가 증가하였으며, 제3국에서 주민접촉 위주로 진행되던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남북간 쌍방교류로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2000년도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상징성이 큰 대형이벤트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남북한 주민들의 왕래를 수반하는 행사들이 성사되었고, 그 동안 중단되었던 북한주민의 남한방문도 재개되어서 사회문화분야의 문화예술 공연단의 초청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0년도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706명으로 1999년에 비해 큰 증가

세를 보였다. 이는 1999년 '제2차 통일농구경기대회'를 위한 서울 방문단 62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 중 평양학생소년예술단(102명), 평양교예단(102명), 북한교향악단(132명) 등 문화·예술분야에서의 남한 방문인원이 336명으로 이산가족분야의 287명, 남북회담의 83명보다 많았다.

2000년도 방북인원은 7,280명으로 1999년 5,599명에 비해 30.0% 증가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현상으로 1989년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방북인원 18,601명중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1998~2000) 방북인원이 16,196명으로 총 방북인원의 87.0%에 달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사회문화분야의 방북은 1999년 329명에서 2000년 674명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0년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분야별 주민접촉을 보면, 언론·출판 49건(233명), 문화·예술 26건(108명), 종교 15건(101명), 체육 11건(38명), 과학·환경 11건(22명), 교육·학술 11건(2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교육·학술, 종교, 문화·예술의 비중이 컸던 예년과 달리 2000년에는 체육과 언론·출판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이 크게 증가했다.

2000년 예술공연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은 북한공연단의 남한방문으로 특징지워졌다. 2000년에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5.24~27)과 평양교예단 서울공연(5.27~6.11)이 성사되었다. 또한 북한 교향악단이 서울을 방문(8.18~24)하여 북한의 고급문화를 남한 대중들에게 선보였으며,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에도 참가하였다.

체육분야에서는 평양 통일탁구경기대회(7.28)에 이어 시드니올림픽개·폐회식 남북한 동시입장(9.15), 금강산 성화채화(10.1) 등 상징성이 큰 행사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다. 특히 통일탁구대회는 체육교류 사상 처음으로 남한과 북한에 동시에 생중계되었다. 경기실황은 TV를 통해 3시간동안 남한에 생중계 되었으며, 북한에도 생방송 되었다. 남한의 주관 방송사는 생중계를 위해 4명의 방송팀을



평양에 보냈다. 그 동안 북쪽에서 열린 남북체육 대회는 90년 남북 통일축구 1차전과 1999년 9월 평양 남북통일농구대회 등 두 차례였으나 모두 북한이 촬영한 화면을 받아서 편집했었다. 또한 전국체전 성화채화가 최초로 금강산에서 이루어져 금강산 유람선편으로 부산으로 수송되었다.

언론분야에서는 각종 회담과 1·2차 이산가족상봉 등의 보도 및 취재에 따른 남북한 왕래교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외에도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8.5~12))하여 남북언론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KBS는 추석특집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생방송(9.12)하였다. 이는 방송사상 최초의 남북공동제작으로 합동으로 백두산과 한라산, 서울에서 동시 생방송이 이루어졌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프로그램에서는 남북한 방송관계자와 주민들이 출연하였다. 특히 백두산 현장에 북측 백두산 전문가가 출연, 남측 사회자와 북측 전문가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백두산을 소개하고 한라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10월에는 사상 최초로 SBS의 평양현지 생방송(10.9~10, 13~14)이 성사되었다.

종교분야에서는 부활절 연합예배(4.23),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8.15) 등 다양한 종교행사가 개최되었다. 부활절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남북 연합예배(4.23)가 열려, 북한 평양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남한 목회자 7명이 북한 교회관계자들과 함께 분단 후 첫 남북 합동예배를 올렸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은 8월 15일 서울 조계사와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남북한 8.15동시법회를 열었다.

1989년에서부터 2000년 말까지 사회문화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협력사업자의 경우 26건, 협력사업의 경우 18건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2000년에는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자 승인 9건, 협력사업이 승인 5건이 이루어졌다. 또한 예년과 달리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남북협력

기금 지원도 크게 확대되었다. 평양소년학생예술단의 서울공연에 3억 1천 9백만원,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에 6억 3천 7백만원 등이 지원되었다.

2001년에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분야의 왕래성 공연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각종 체육 경기 대회의 정례화를 통한 인적 교류 확대 및 남북 단일팀 구성 등 체육교류의 활성화가 가시화될 것이다. 방송분야의 경우에도 다큐멘터리 등이 남북공동제작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평양신학원 개원 지원 등 각 교단 및 종단별로 종교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평축구의 부활, 학자·학생 교환방문, 백두산과 한라산 교차관광 등이 실시될 것이다.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 시 이에 상응하는 상징적 사회문화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와 병행하여 북한체제 이완에 대한 북한당국의 경계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징성이 큰 이벤트 중심으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반면 소규모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인도주의 사안

### 가. 이산가족문제

2000년에도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정부는 북한과의 당국 및 비당국회담에서 인도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 문제의 우선적인 해결을 촉구해 왔다. 그 동안 북한은 이산가족을 '월남자 가족'으로 칭하고 반혁명적 요소로 간주하여 이들에 대한 차별정책을 취해왔고, 이산가족의 상봉과 교류는 외부 정보의 유입을 초래하여 체제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여 이산가족 문제의 논의를 기피해 왔다.

최근 북한의 경제난 악화와 식량난문제로 기아에 의한 사망자와 탈북자가 증대하자, 경제난 타개를 위한 외화벌이 차원에서 개인 또는 기관들이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을 주선하는 데 개입하여 외화수입을 도모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의 묵인 하에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은 지속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이산가족문제를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여 이산가족 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3월 '베를린 선언'을 통해 정부차원의 대북경협을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동시에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해결도 주장하였다.

또한 남한정부는 이산가족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적 조치로 이산가족의 교류절차를 간소화하여 2000년도부터는 이산 1세대(이전에는 60세 이상)는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비 지원을 두 배 이상 올렸다. 지원경비를 생사확인의 경우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봉지원의 경우 8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렸고, 서신 교환 등 교류지속에 필요한 경비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산가족교류 주선단체와 이산가족교류 기여 촉진자들은 교류실적에 따라 2,000만원까지 년 1회 지원했던 것을 2000년부터 분기별 1회로 늘렸다. 이와 같은 국민의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증가하였다.

〈표 III-1〉 이산가족 교류 현황

연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1,239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1,023
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남북상봉									1	5	410

자료: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http://reunion.unikorea.go.kr/main\\_news.html](http://reunion.unikorea.go.kr/main_news.html)

남북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등 남북간에 미해결로 남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와 같은 남북정상의 합의를 시행하기 위해 조속히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 회담이 개최(6.27~6.30)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합의되었다. ① 8월 15일~18일까지 이산가족방문단(이산가족 100명을 포함한 총 151명의 대표단)을 교환방문한다. ②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향장기수를 전원 송환하는 즉시 적십자회담을 열고 협의·확정한다. ③ 10월과 11월에 각기 100명 규모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④ 이산가족 면회소와 서신교환의 규모 확대는 다음 회담에서 토의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8월 15일 이산가족의 교환방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남한은 9월 3일 비전향장기수 중 북송을 희망하는 63명 전원을 송환하였다. 또한 남한은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60만 톤(50만 톤은 차관, 10만 톤은 세계식량계획 기구를 통해서 무상지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금강산 호텔에서 제2차 남북적십자 회담이 개최(9.20~23)되

어 2차 이산가족 상봉과 100명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을 11월초에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측의 사정으로 한달 가량 늦게 남북 이산가족 200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두 번째로 상봉하였다(11.30~12.2). 그러나 북측은 장충식 한적 총재의 월간지 인터뷰를 트집 잡아 장충식 총재가 대표단장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등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현안문제는 2000년 12.12~16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대두되었다. 여기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 일정 조정, 제3차 방문단 교환은 2001년 2월말 쌍방 각기 100명, 생사·주소 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 서신교환은 3월에 300명씩 등이 합의되었다.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은 이산가족문제를 대북전력 지원(50만 kw)과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면회소 설치와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항구적 대책 마련에 진전이 없었다.

2001년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1.29~31)에서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2.26~28), 3월 15일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 대상)를 통한 서신교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의 규모 확대 등이 합의되고, 구체적 사항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4.3~5)에서 협의·확정하기로 되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인 면회소 설치와 상봉의 정례화, 서신교환 및 그 규모의 확대는 2001년으로 예정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과 대북 전력지원 등 경제협력 사업과 연계되어 타결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 남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에 억류된 미송환 국군

포로는 1만 9천 여명으로 추산된다. 그 동안 남한은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미송환 국군포로들의 실태는 탈북·귀환한 국군포로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그들은 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각종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9년 말까지 귀환한 국군포로는 모두 8명이며 2000년 말까지는 모두 17명이다.

2000년 말 현재 정부가 신원을 확인하여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미송환 생존 국군포로의 수는 모두 351명이다. 이러한 숫자는 국내입국 북한 이탈주민과 귀환 국군포로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집계된 것이다.

납북자 문제와 관련,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790명이고, 이 중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총 487명이다. 납북된 사람의 대부분은 어부들로 1955년 5월 「대성호」와 어부 10명을 강제 납치한 후 총3,692명의 어부들을 납치하였다가 3,256명을 돌려보내고 현재까지 436명의 어부를 억류하고 있다. 또한 1970년 6월 5일 납치한 해군 I-20정 승무원 20명 전원과 선박을 억류하고 있으며, 1969년 12월 11일 대한항공 여객기와 함께 납치한 승무원과 승객 중 12명을 억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1979년 4월 노르웨이에서 고상문 남한 교사와 1995년 7월 안승운 순복음교회 목사 등을 납치·억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납북억류자가 북한에 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납북억류자들 중 일부는 대남선전과 간첩교육에 이용되고 있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용가치가 없는 일부 납북억류자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7월 30일 AI가 밝힌 49명의 정치범 명단에 고상문과 유성근 등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은 이재환 등 납북·월북자 22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송환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

군포로 송환에 관한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99.1.24)과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군포로·납북자와 출소공산주의자의 맞송환을 위한 남북 당국간의 대화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상호주의, '장사꾼의 논리'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남한은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납북자와 국군포로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북한은 「북한에는 국군포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의거 입북자는 있어도 납북자는 한 명도 없다」고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박기륜 한적 수석대표는 제2차 남북 적십자회담 후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는 다른 채널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힘으로써 남북간에 물밑 접촉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남북 당국이 지난 제2차 남북 이산가족 평양상봉에서 남북선원과 남쪽의 어머니의 상봉을 허용한 것은 납북자 문제를 이산가족문제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남북 당국은 2001년에도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 차원에서 다룰 가능성이 있다.

#### 다. 대북지원

국제사회는 1995년 6월 이후 2000년 말까지 16억 6,073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제공하였다. 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대북지원에서 남한 정부와 국내민간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000년도 우리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총 1억 1,376만 달러(정부 7,863만 달러, 민간차원 3,513만 달러)를 제공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유엔 기구를 통한 통합지원(9,067만 달러), 개별국 직접지원(26만 달러), 국제 NGO를 통한 지원(1,573만 달러) 등의 방식으로 총 1억 666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2000년도 국내 대북지원액은 지난 해 대비 142.7% 증가하여, 국제사회 전체 대북지원액(2억 2,042만 달러)의 51.6%를 차지하였다(표 참조). 국내의 대북지원은 농업복구분야(8,562만 달러) 75%, 보건의료분야(1,380만 달러) 12%, 일반구호(1,434만 달러) 13%로 이루어졌다. 지원품목은 정부가 지원한 비료 30만 톤을 포함하여, 옥수수, 밀가루, 씨감자, 의류, 의약품, 의료기구, 학용품, 손수레, 온실자재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정부는 1999년 10월 민간 대북지원사업의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정부는 유진벨재단 등 8개 민간대북지원단체의 9개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54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다.

제2차 장관급회담 시 북측은 심한 가뭄 등으로 곡물 수확량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량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내부사정을 공표하면서 식량지원을 공식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당국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측은 북측이 연이어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실정에서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북측에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추진한다"고 합의하였다. 남한정부는 북측이 식량지원 문제를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이는 남북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북측의 정책방향이 확고함을 의미하며, 차관형식이라는 점에서 향후 상호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sup>5)</sup>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9.25~26, 서울)에서 남측은 북측에 태국산 쌀 30만 톤과 중국산 옥수수 20만 톤의 식량을 차관<sup>6)</sup>형식으로

---

5) 통일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결과 해설자료," 「통일속보」 제2000-8호.

6) 차관조건은 10년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 상환, 이자율 연1%로 하며,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 조선무역은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제기구 WFP로부터의 지속적인 대북식량지원 참여 요청을 감안하여 식량차관 외에 외국산 옥수수 10만 톤을 국제기구 WFP를 통하여 북한에 무상지원하기로 하였다.<sup>7)</sup>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정부의 협력기금 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 해 대비 87.8% 증가하였다. 지원방식도 대한적십자 창구(113.3억 원, 27%)보다는 민간단체의 독자 창구(307.4억 원, 73%)의 비중이 늘었으며, 대북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관계자의 방북활동이 크게 증가하였다(41건 148명). 남한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농업지원 형태로 비료 30만 톤을 지원하였고, 60만 톤의 대규모의 식량지원(차관 50만 톤, 지원 10만 톤)을 실시함에 따라 정부가 대북지원의 주요 지원 주체가 되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지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목표액 대비 호응도 및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별국 단위의 직접 지원이 전년도 5,100만 달러에서 26만 달러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대해 식량지원보다는 장기적인 농업복구와 보건·의료 분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실제로 2000년도 목표대비 충족도를 보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식량지원 93.4%, 농업복구 2.9%, 보건·영양 2.9%, 식수·위생 0.2%, 사업조정 0.7% 등으로 아직도 식량지원에 치중되어 있다.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비정부기구와 북한지역 관료들간에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접촉이 가능하다는 것은 향후 남북협력을 위해서

---

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고 합의하였다.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2000.9.26.

- 7) 식량차관 50만 톤 제공에 약 9,000만 달러, 국제기구 WFP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10만 톤 무상지원에 약 1,100만 달러 소요되었으며, 재원은 민족공동체 회복지원을 위한 대출의 형식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제공되었다.

바람직하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간 화해·협력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향후 국내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교류·협력이 가속 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경제협력방식의 대북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참여했던 서방국가들과 북한간 정식 외교 관계가 수립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대북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현재 WFP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의 대북사업은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는 바, 국제기구들은 대북사업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기구들은 긴급구호성 대북지원보다는 북한의 자생력 강화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양자간의 직접지원을 통한 경제지원을 희망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 국의 대외원조 전담기관을 통한 대북지원방식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표〉 분야별 대북지원개요 - 단위: 만 달러 (괄호안은 백분율)

구 분	'95.6	'96	'97	'98	'99	2000	누 계
일반구호	23,225 (100)	455 (99)	4,329 (92)	2,891 (91)	565 (12)	1,434 (13)	32,899 (69)
농업복구		5 (1)	205 (4)	254 (8)	3,941 (84)	8,562 (75)	12,967 (27)
보건의료			189 (4)	40 (1)	182 (4)	1,380 (12)	1,791 (4)
계	23,225 (100)	460 (100)	4,723 (100)	3,185 (100)	4,688 (100)	11,376 (100)	47,657 (100)

자료: 통일부 인도지원국

<http://www.unikorea.go.kr/kr/load/C34/C3454.htm>

〈표〉 국제사회 지원액 대비(단위: 만 달러)

구분	'95.6-	'96	'97	'98	'99	2000	누계	
한국	정부	23,200	305	2,667	1,100	2,825	7,863	37,960
	민간	25	155	2,066	2,085	1,863	3,513	9,697
	계(A)	23,225	460	4,723	3,185	4,688	11,376	47,657
국제사회(B)	5,565	9,765	26,350	30,199	35,871	10,666	118,416	
총계(A+B)	28,790	10,225	31,073	33,384	40,559	22,042	166,073	
A/A+B(%)	80.7	4.5	15.2	9.5	11.6	51.6	28.7	

자료: 통일부 인도지원국

<http://www.unikorea.go.kr/kr/load/C34/C3454.htm>

## 라. 인권문제

2000년 남북관계에서 인권문제는 정상회담 이후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1999년 당시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이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연설(3.25, 제네바)에서 탈북자문제를 한국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기하였으며, 2000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하여 탈북자문제를 북한인권 차원에서 거론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거론을 자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태평화재단 국제학술회의 참석자들과의 담화(2.26)에서 "북한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서방과의 대화,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노력 대신 반복, 반김정일차원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냉전적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도주의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인권문제, 특히 탈북자 문제

에 대한 활발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프랑스 지식인·시민 100여명이 '북한에 대한 침묵을 깨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북한정권의 인권탄압과 기아사태에 대해 전세계의 관심을 촉구(1.25)하였다. 이 성명은 "북한에는 죽음이 지배하는 강제수용소가 10여 군데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주의 국가의 광기는 수용자만 덮치는데 그치지 않고 불과 몇 년만에 100만~300만 명을 굶어죽게 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비난에 그치지 않고 대북지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프랑스 등 유럽지식인 30명이 북한인권개선 호소문을 채택(9.22)하였는데, 이 호소문은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의 참상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 통일을 위해 전세계 여론의 힘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고, 북한주민을 돕기 위한 유럽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공개처형에 대한 특별보고서('97.1.22)를 발간했으며, 유엔인권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98.8.19)에 이어 유럽지식인 21명도 「북한선언문」을 발표(99.3.10)하였다.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위원회는 미국과 영국이 남북한 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에는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도 높게 비난(2000.8.2)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1.16)는 중국 등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동 보고서에서 북한당국에 대해 탈북과 관련한 형법 조항 개정, 망명에 대한 정치적 권리보장, 구류·고문·처형 등 인권유린 행위 중지, 강제송환자들의 행방 및 법적 지위에 대한 정보공개, 탈북자에 대한 협박 및 체포 중단, 국제인권기구의 독자적인 접근 허용 등을 요구하였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북한은 미국이 연례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평가한 목적은 인권문제를 내정간섭과 강권정

책 수단으로 이용하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노근리사건'과 미국 내 유색인종 차별문제 등을 내세워 미국을 가장 악독한 인권유린자라고 비난하였다(3.5).

또한 북한은 국제 NGO회의에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극 방 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무형벌에 대 향하는 아시아인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NGO회의(4.11)에서 국제 NGO단체들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자 이의 증지를 요청하면서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였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 NGO 및 국제기구의 문제제기는 있었으나 남한을 포함한 미국 등의 주요 관련국들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 문 제를 묵과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북한의 위협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도 별도로 인권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2001년에 NGO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의 북한인권문제에 대 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다. 한편 최근 북한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점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관심을 의식 한 북한이 인권문제에 다소나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 5.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관계

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북한은 국제무대에서 그 동안과는 달리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부터 벗어나 대화와 접촉을 하 면서 때로는 협력하는 양상을 보였다.

남북한의 외무장관은 7월 26일 방콕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대외관계와 국제무대에서 상호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

동발표문을 채택하였다. 동 회담에서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남북한 재외공관간의 상시 협력채널 구축, 유엔과 아세안지역포럼(ARF) 등에서 외무장관 회담 정례화 및 협조,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 가입 지원 의사를 제시하였다.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도 "남북협력사안에 대해 의논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 동 회담에서 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전달하였으며, 백 외무상은 미사일 개발이 평화적 용도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홍순영 중국주재 한국대사는 베이징 주재 외교사절단 단장인 주창준 북한대사를 신임인사차 북한대사관으로 방문, 면담(9.26)함으로써 해외 주재 남북한 대사간에 상대측 대사관을 방문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의 유럽주재 한국공관들은 10월 3일을 전후해 개최한 개천절 경축행사에 북한외교관을 공식 초청하였으나 북한측은 참가하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남북한간의 화해 및 상호 신뢰분위기의 조성은 서방선진7국 및 러시아(G-8) 정상회의에서의 「한반도에 관한 특별성명」 채택(7.21),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의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 등의 채택(10.20)으로 이어졌다. 또한 제8차 APEC 정상회의는 남북관계 개선지와 북한의 APEC 참가 동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장국 발표문을 채택(11.16)하였으며, 리비아 외무장관(7월), 베트남 외무장관(8월), 미국 국무장관(10월) 등 외국의 고위급인사들의 남북한 동시 방문이 이루어졌다.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 노력이 확대됨에 따라 남한정부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더욱 강화하였다. 남한은 북한이 교육, 정보기술, 환경변화 등 아시아유럽회의(ASEM) 활동에 참여하는 데 환영의 뜻을 표하고 7월 30일 ASEM 고위관계자 회의에서 이를 위한 지침 마련 논의를 적극 제기하였다.

2000년 제55차 UN총회(9.5~12.23, 뉴욕)는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 고조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장이 되었다. 한편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9.6~9)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미국 항공사의 검색 사건에 불만을 표시하고 귀국함으로써 유엔에서 남북한 국가수반간의 상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한은 유엔총회기간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내용의 밀레니엄 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이 발표(9.7)되도록 협력하고 총회결의안('한반도 평화, 안보, 통일')을 공동 추진하여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10.31)하도록 함으로써,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가 상호 협력을 지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다. 특히 남북한은 한반도 의제 추가에서 결의안 초안에 이르기까지 유엔외교 사상 처음으로 공동보조를 취했다. 다만,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이 UN총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남북 외무장관의 유엔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UN총회연설(9.19)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그 이후의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는 한반도에 냉전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이형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UN총회연설(9.15)에서 한반도의 "전환적 국면은 세계적 의의를 갖는 긍정적 사태 발전"이라고 평가하고, 남북한의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살려 하나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적극 취해나간다면 통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측 대표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예년과는 달리 남한에 대한 비난이 사라짐으로써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남북한의 국회의원들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국제의회연맹(IPU)의 공동 주관 하에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개최(8.9)된 동북아인권워크숍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회동하였다. 남북한

의 국회의원 대표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04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10.14~17)에서도 조우하여 과거와는 다르게 상호간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접촉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협력도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내에 '북한문화재 보존지원 신탁기금'의 설립과 관련, UNESCO와 공여국 협정을 체결하고 10만불을 출연하였다. 이어 북한과 UNESCO가 동 신탁기금의 운영을 위한 수혜국협정(Plan of Operaton)을 체결(11.17)함으로써 신탁기금 설립 절차가 완료되었다. 동 신탁기금은 한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대북 지원을 목적으로 국제기구 내에 설립한 최초의 신탁기금으로서 특히 수혜국 협정문상 '대한민국' 국호를 명기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이 다자외교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며, 문화재 보존분야에서 남북한간 최초의 협력사례이다.

또한 북한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회원국의 고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안전자문그룹(NSAG)이 뉴욕 KEDO 본부에서 개최(12.4~5)한 제5차 회담에 김영일 핵통제위원회(NRC) 위원장 등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남북한 전문가간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남북한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대회(9.15~10.1)의 개막식에서 선수 대표들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함께 입장하였으며, 남북한 선수들은 경기기간 중에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워싱턴 소재 비정부기구(NGO)인 「공동의 장 탐색」(Search for Common Ground)은 남북한 정상에 대하여 한반도 분쟁을 종식시킬 역사적 돌파구 마련의 공로를 기려 국제평화상을 수여하기로(12.4)하였다. 특히 미국에서 유엔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12월에 컬럼비아대 대학원 한인총학생회 주최 제80차 코리아포럼(12.1),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강연(12.15), 재미실업인연합회 송년모임(21.21) 등에 참석하여 한국의 외교관들과 자유롭게 접촉함으로써 민간 단체의 자리에서도 남북한 관리들



간에 민족 화해를 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0년에 북한은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제56차 총회, 세계 보건기구(WHO) 제53차 총회,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제31차 총회,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제9차 총회, 아·태안보협력기사회(CSCAP) 북대평양 작업반 회의 및 운영위원회 등 경제관련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북한 대표단은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계속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MF, IBRD 연차총회(9.19~26)에는 준비기간의 부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7월에 ARF에 가입하였으나 아직 안보관련 국제회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IAEA 제44차 정기총회(9.18~22, 비엔나)에서는 북한에 대해 포괄적인 핵사찰을 허용할 것과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시 약속한 합의내용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00년 이탈리아(1.4), 필리핀(7.12), 영국(12.12)과 수교하고 호주(5.8)와 외교관계를 복원한 북한은 2001년에도 전방위(全方位) 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 독일, 스페인, 벨기에 등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국교가 없는 미얀마와 관계를 재개하고, 뉴질랜드와도 수교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은 ADB, APEC, IBRD를 비롯한 국제기구 가입을 위한 노력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2001년에도 WFP, FAO, UNIDO 등 경제관련 국제기구 회의를 비롯하여 비정부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식량의 추가 확보 및 경제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므로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협력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이다.

남북간 철도연결사업의 진전과 함께 중국횡단철도(TCR)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3각협력 논의가 추진될 가능성

이 있다. 민간 차원에서도 학술, 체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제3국을 통한 남북한의 교류와 접촉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다만, 북한은 유엔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고려연방제'에 바탕을 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일방안으로서 강조할 것이며,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 미·북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등의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부록〉 2000년도 주요 사건일지

1.1 북한,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 "당창건 55돐(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발표

1.16 국제사면위원회(AI), 북한인권보고서 발표

1.19~23 遲浩田 중국 국방장관 한국 방문

1.22~28 김계관-찰스 카트먼 베를린 회담

1.23 일본 우익단체, 난징대학살과 중국 침략 사실 부인하는 대집회 개최(오사카)

1.24 김정일,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 현지도도

1.24~26 熊光楷 중국군 부참모장 미국 방문

1.26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1158군부대 시찰

1.25 프랑스 지식인·시민 100여명, "북한에 대한 침묵을 깨자"는 성명서 발표

1.30 김정일, 평안북도 공업부문 사업 현지도도

1.31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667군부대 시찰

1.31~2.2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러시아 방문

2. 1 미 하원, 「대만안보강화법안」 채택

2.9~10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평양 방문

- 신조약 공식 조인

2.10~11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일본 방문

2.12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440군부대 관하 여성해안포중대 및 새롭게 개건된 무지개동굴 시찰

2.14 제4차 「한러문화공동위원회」 개최

2.15 김정일 58돌 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

2.16~19 스트로브 탈보트 미 국무차관 중국 방문

- 제3차 중·미 안보회담
- 2.17 중국, 「인권백서」 발간
- 2.17~18 제1차 한·러 군축·비확산회의 개최
- 2.18 김정일,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894군부대 시찰
- 2.21 중국 국무원, 「하나의 중국원칙과 대만문제」 백서 발간
- 2.25 미 국무부, 「'99 세계인권보고서」 발표
- 2.26~27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 개최
- 3. 2 북한, 서해 NLL 불인정 담화 발표
- 3. 5 김정일, 주북 중국대사관 방문
- 3.8~15 김계관-찰스 카트먼 뉴욕 회담 개최
- 3. 9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 3.12 김정일,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 3.18 조성태 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개최
- 3.23 북한, 「서해 5개섬 통항질서」 공포
- 3.24~25 북한, 제3차 전국선동원대회 개최
- 3.26 김정일, 양강도 '대홍단군 종합농장' 현지지도
- 3.26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
- 3.29 김정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의 사업 현지지도
- 4.2 김정일, 자동화대학 시찰
- 4.4~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회의 개최
- 4.4~7 제9차 북일수교교섭 본회담 개최(평양)
- 4. 8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7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 4. 9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1311군부대 및 제3995군부대 시찰
- 4.10 6월 13~1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하기로 합의

- 4.14 김일성 88돌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
- 4.14 러시아 하원, 7년전 미·러가 체결한 STARTⅡ 비준
- 4.17 북한, 러시아와 '2000~2001년 두 나라간 문화 및 과학협력협정' 체결
- 4.22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1차 준비 접촉
- 4.24~27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미국 방문
- 4.25 김정일, '건군절' 즈음 조선인민군 제1321군부대 방문
  - 인민군 창건 68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 4.25~26 한·러 국방부간 제3차 국방정책 실무회의 개최
- 4.27~28 북한, 공업설비관리운동인 '전국26호모범기대창조운동 선구자대회' 개최
- 4.29 푸틴과 모리 총리간 비공식 정상회담 개최
- 4.31 국제노동자절(5·1절) 11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 5. 3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3차 준비 접촉
- 5.4~16 북한 군사친선 대표단 러시아 방문
- 5. 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4차 준비 접촉
- 5. 9 김정일, 새로 건설된 '열대메기공장' 현지도
- 5.11 북한, 불기 2544년 석탄절 봉축법회 및 조국통일 기원 남북 불교도들의 동시법회 진행
- 5.14~18 제15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최
- 5.16 김정일, 평북 용천군 소재 선박기계공장 '북중기계연기업소' 현지도
- 5.16 조성태-세르게예프 한·러 국방장관 회담 개최
- 5.17~27 한·러 양국 차관간 「상호교환방문 합의각서」에 따라 한국군 사절단 러시아 방문
- 5.24 미하원 중국에 대한 '영구 정상무역관계'(PNTR) 부여법안 통과, 상원 통과(9.19), 클린턴 미 대통령 서명(10.10)

- 5.24~27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공연
- 5.24~30 김계관-찰스 카트먼 로마 회담 개최
- 5.27~6.11 평양교예단 서울 공연
- 5.29 김대중-모리 요시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 5.29~31 김정일, 중국 방문
- 6.3~5 클린턴 대통령 러시아 방문
- 6.7~9 북한과 미국,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유해 송환 협상
- 6. 8 이형철 주유엔주재북한대사, 유엔 특별총회 '여성2000년회의' 본회의 연설
- 6.13~15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정상회담 개최, -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 발표
- 6.17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중국 방문
- 6.19 김정일 당 사업 개시 36돌 즈음 「로동신문」 사설, "절세의 위인을 영도자로 모신 영광을 만대에 빛내어 나가자' 보도
- 6.20~29 한·러 양국 차관간 「상호교환방문 합의각서」에 따라 러시아군 사절단 한국 방문
- 6.21 김정일, 평북 영변견직공장과 박천견직공장 현지지도
- 6.21 클린턴, 달라이 라마 접견
- 6.22~23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중국 방문
- 6.23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3차 군인가족 예술소조경연 관람
- 6.27~30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 6.28~29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 러시아 방문
- 6.29 현대그룹 정주영, 정몽헌, 원산에서 김정일과 담화, 평양실내 체육건설장 현지 답사
- 6.29~30 한국, 미국, 일본 고위급 대북정책협의회의인 '3자 조정·감독그룹' 회의 개최
- 6.30 현대의 금강산 일대 경제특구 개발 합의

- 6.30 김정일, 재미 여류기자 문명자 접견
- 7. 4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3971군부대 시찰
- 7. 5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 시찰
- 7.10~12 제5차 북미 미사일회담 개최
- 7.11~18 인민군 중장 한원화를 단장으로 하는 군 친선참관단 중국 방문
- 7.12 북한, 필리핀과 외교관계 수립 협정 체결
- 7.17~19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국 방문
- 7.19~20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 방문
  - 「조·러공동선언」 채택
- 7.21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G-8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관한 특별성명」 채택
- 7.26 이정빈-백남순 외교통상장관 회담 개최
  - 백남순, 일본 외상 고노 요헤이와 공식 외상 회담 개최
- 7.27 북한, 아세안지역포럼(ARF) 정식회원으로 가입
- 7.28 평양 통일탁구대회 개최
- 7.29~31 서울에서 통일부장관과 전금진 내각 책임참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
- 8. 1~2 김정일, 함경북도 공업부문사업 현지도
- 8.5~12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언론사 사장단 방북
  - 김정일, 문화관광부 장관과 언론사 사장단 접견
- 8. 9 김정일, 방북 정몽헌 현대아산 의장 일행과 오찬
- 8. 9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국제의원연맹(IPU)이 공동 주관한 동북안인권워크숍에서 남북한 의원 회동
- 8.9~10 김계관-마이클 쉬언, 테러지원국 해제문제 관련 회담 개최
- 8.15~18 남북 양측은 서울과 평양에서 각 100씩의 이산가족 교환

## 방문 실시

8.17 조평통 대변인, 한·미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 실시 비난 성명 발표

8.20~21 조선국립교향악단 서울 공연

8.21~25 지바현 기사라즈에서 제10차 북일수교교섭 본회담 개최

8.23 현대의 개성공단 개발 합의

8.27 김정일, 함경남도내 성천강 29·30·32호 발전소 및 6월4일공장·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 현지도

8.28 김정일, 원산시 소재 갈마휴양소 시찰

8.28~31 김정일, 자강도내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 현지도

8.28~31 고노 일본 외상, 중국 방문

8.29 조선천도교청우당·조선천도교회 합동전원회의 개최

8.29~9.1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8.(?) 한·중 합참의장회담 개최

9. 2 북송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63명 전원 송환

- 김일성광장서 비전향장기수 환영행사

9.3~5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일본 방문

9. 4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9.6-8) 참석차 뉴욕으로 향하던 중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미국 AA항공사측의 보안검색에 항의, 미국방문 취소후 평양 귀환

9. 5 비전향장기수 북송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

9. 7 제55차 유엔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내용의 천년 정상회의의 공동의장 성명 발표,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9. 8 북한정권 창건 52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 평양방송, 고상문의 체험수기 "공화국은 영원한 내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방송

9. 8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클린턴과 장쩌민 중미정상회담



개최, 김대중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 개최

9.11~14 김용순 특사 서울 방문

- 대장 김재경,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첫물 송이버섯' 전달(9.11)

- 김용순 일행, 김대중 대통령 예방(9.14)

9.12~19 제3차 북송 일본인처(16명) 일본 방문

9.15 김정일,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 접견

9.15~10.1 개막식과 폐막식에 남북한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동시 입장

9.18~22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 제44차 정기총회에서 북한에 대해 포괄적인 핵사찰을 허용할 것과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시 약속한 합의내용 준수를 촉구하는 북한 결의안 통과

9.20 김정일, 새로 건설된 메기공장 현지지도

9.20~23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9.21 제3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개최

9.22 프랑스 등 유럽지식인 30여명 북한인권개선 호소문 채택

9.22~27 제1차 조총련동포의 한국방문 사업 실시

9.24 김대중-모리 요시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9.25~26 조성태-김일철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

- 제1차 남북경제협력실무 접촉

9.26 홍순영 중국주재 한국대사, 베이징 주재 외교사절단 단장인 주창준 북한대사를 신임인사차 북한대사관으로 방문

9.27~30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9.27~10.2 김계관-카트만 뉴욕 협상 개최

9.30 김정일,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금강산관광지구 시찰

10.4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33호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발표

- 1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3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 10.9~12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겸 군 총정치국장 미국 방문
- 10.10 김정일, 당 창건 55돌 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 참관
- 10.10~11 강석주-서면과 북·미 회담
- 10.12~17 주룽지 중국 총리 일본 방문
- 10.14 김정일,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경축공연 관람
- 10.14~1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04차 국제의원연맹 (IPU) 총회에 남북한 의원 동참
- 10.17~20 북한, 러시아와 '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3차회의 개최
- 10.18 김정일, 인민군 군인들이 건설한 메기공장 현지지도
- 10.20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 채택
- 10.20 김정일, 국제태권도연맹 최홍희 총재 접견
- 10.20 북한, 러시아와 '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10.20 북한-KEDO, 경수로 관련 훈련의정서 조인
- 10.23~25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평양 방문
- 10.25 김정일, 중국 고위군사대표단 단장 遲浩田 일행 접견
- 10.30~31 제11차 북일수교교섭 본 회담 개최
- 10.31 김정일, 제30차 '예술인체육대회' 참관
- 11.1~3 제6차 북·미 미사일회담 개최
- 11.2 김정일, 인민군 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112호 닭공장' 현지지도
- 11.3~4 카시아노프 러시아 총리 제5차 중러 정기총리 회담차 중국 방문
- 11.7 김정일, 안변청년발전소와 내평발전소,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 부업농장 현지지도

- 11.7 미국 대통령 선거 실시, 부시 당선
- 11.8~11 제2차 남북경협 실무 접촉
- 11.13 김정일, 새로 건설된 '청년영웅도로' 시찰 및 '황주닭공장' 현지지도
- 11.16 제8차 APEC 정상회의에서 남북공동선언 및 남북관계 개선 지지와 북한의 APEC 참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장국 발표문 채택
- 11.17 제2차 조총련 고향방문단 한국 방문
- 11.22 김정일, 오중흡 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인민군 제833군부대 시찰
- 11.26 김정일, 양강도 대홍단군 감자전분공장, 백산분장대홍단 4호 청년발전소, 종합농장 등 현지지도
- 11.27 김정일, 삼지연 제대군인 윤성철의 가정, 포태 3호발전소, 포태종합농장 등 현지지도
- 11.28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 11.30 김정일, 정평군 금진강 발전소 언제건설장, 함흥시 원료기지 농장 등 현지지도
- 11.30~12.2 서울과 평양에서 각 100명씩 2차 이산가족 교환 방문 실시
- 12.5 제2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 12.5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 시찰 및 황해남도 토지 정리사업 현지지도
- 12.7 김정일, 평양시에 새로 건설된 여러 공장, 기업소 현지지도
- 12.10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한의 국방백서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사실을 비난하는 대변인 성명 발표
- 12.12~15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12.21 제3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 12.28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타결
- 12.28~30 제1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개최